

제1절 원자력산업과 반핵운동

1. 1차 핵폐기장 설치 반대 운동

1) 생존권 보장 및 핵폐기물처리장 반대 운동[1988. 11~1991. 5]²⁸

원자력발전소건설·운영은 울진지역의 사회·경제적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들 변화는 197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개발 위주의 도시산업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피해해 진 농어촌 지역의 경제 구조를 향상시켰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부지선정과 예정지 지정 등 정부에 의한 일방적 추진과 원전 안전성 논란으로 지역사회의 생존권적 우려와 사회적 갈등, 대규모 상업자본의 유입에 따른 양극화 현상 등 급격한 사회적 계층분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으로 진행되었다.

울진지역에서 원자력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인 1989년 무렵부터이다. 1980년대 후반 이후 대형 국책사업, 특히 원자력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되는 직접적 요인은 80년대 이후 붓물 터지듯 터져 나온 정치·사회 민주화 요구와 무관하지 않다. 주지하다시피 한국 사회는 1961년 박정희 군사정권 이후 근대화 와 개발우위 패러다임이 국가이념으로 정착하면서 국가권력이 국민의 전 생활을 결정하는 불가항력적 권력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국가권력은 당시 ‘산업화와 반공이데올로기’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일상적 권력’으로 행사하게 된다. 울진지역에서의 원전과 관련한 갈등 양상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전개됐다. 정부의 원자력 에너지 정책의 폐쇄성에 대한 저항과 원전 안전성 문제의 대두 그리고 원전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의 반 현실성 등이 그것이다.

먼저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한 갈등은 1970년대 후반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부지를 일방적으로 확정하는 데서부터 이미 갈등의 단초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 정부는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울진, 영광, 월성 등지를 원전 부지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오늘날과 같은 지역 주민 의견수렴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결정해왔다. 이 같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반민주적인 정책추진은 80년 이후 붓물처럼 터져 나온 정치·사회 민주화 요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었다.

80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고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반민주적 국가 운영이 낱알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정치·사회 의식 또한 괄목할 만큼 신장되고 확산되었다.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는 울진지역에서도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

28. 아래의 반핵운동은 2001년에 간행된 『울진군지』상을 참고하여 기술하였다.

울진지역에 원전 관련 주민 갈등과 저항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1989년경이다. 이 무렵은 당시의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변모시키는 ‘소중한 사업’으로 받아들여진 울진 원전 1·2호기가 잇따라 준공되면서 상업 가동에 들어간 시기이다.

1979년 무렵 울진지역이 원전건설지로 결정되고 부지 매입 등 건설이 본격화된 원전건설은 당시 지역주민들로부터 ‘현금을 만지게 해준 고마운 산업’으로만 인식되어왔다. 곧 울진 지역민들은 원전에 대한 아무런 상식도 가지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에 관한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다. 그저 ‘너도나도 도시로 떠나는 시골 동네에 외부인력을 들끓게 만든, 평생 구경도 못 할 목돈이 일상처럼 오가게 만드는, 그저 고마운 존재’로만 여긴 셈이다.

지역민들은 원자력발전소가 본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나 안정성 우려 따위는 전혀 고려치 못한 채 반농반어의 일상에 매달리면서 농한기나 틈나는 대로 일자리를 갖게 해주고, 정부와 한전 측이 강조하는 대로 “우리 지역이 원전만 계속 지으면 잘살게 되는” 생각만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원전 부지 매입 당시 일반시세보다 크게는 3배 이상의 보상이 이뤄졌고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앞다투어 건설 현장에서 품을 팔아 현금을 쉽게 만질 수 있었기 때문에 부지 내의 주민들은 물론 부지 바깥의 주민들도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었던 터였다.

그러나 이 같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는 울진 원전 1호기가 상업 운전을 시작한 1989년경에 대폭 변화하기 시작한다. 이 변화를 촉발하는 것이 ‘정부에 의한 핵폐기장 후보지 발표’와 ‘울진 원전 1호기의 고장 사건’이다.

1988년 9월, 울진 원전 1호기가 상업 운전에 들어간 지 50일 만에 원자로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자 주민들 사이에 원자력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 같은 지역사회의 분위기가 확산되자 북면 부구리 지역 청년들을 중심으로 원전에 대한 피해와 보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개진되기 시작했다.

이들의 논의는 ‘울진원자력 인근 주민 생존권대책위원회[이하 생대위]’라는 주민 자생 단체 구성을 낳게 된다. 당시의 생대위는 부구리 주민들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나, 1988년 12월 경에 부구리를 포함한 인근 14개 리 단위 마을 주민들로 확대 재편된다. 이들 조직은 1989년 1월 24일 ‘원자력인근주민생존권보장공동대책위원회’로 공식 출범한다. 당초 이들 생대위는 원자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피해 보상과 안정성 확보가 주된 목적이었다.²⁹

당시 이들 조직이 요구한 것은 △ 실업난 해소를 위한 주민 우선채용 △ 인근 지역 간이 상수도 확장 △ 부구리 제방 축조 △ 농업용수 해결 △ 해안침식 및 매몰 현상에 따른 보상 △ 방파제 주변 해안해산물 채취 허용 △ 인근 지역 경보기 설치 등이다.³⁰

29. 울진군, 2001, 『울진군지』상, 457쪽

30. 울진군, 2001, 위 책, 458쪽

그러나 1989년 정부가 한국에너지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북면과 기성면 일대’를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하 방폐장] 후보지로 발표하면서 이들 조직은 ‘방폐장 반대’를 1차적 목표로 전환, 설정하면서, 방폐장반대운동이 본격적으로 점화된다.

생대위는 정부의 ‘방폐장 후보지 발표’가 있자 1989년 3월 9일, 총회를 열고 7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한다.³¹

△ 핵폐기물 영구처분장 설치 금지 △ 방사능 누출 시 주민 비상 방어계획 수립 △임시 핵폐기물 처분시설 공개 및 폐기물 증감사항 공개 △ 주민생존권 요구사항 신속 해결 △허위 홍보 및 왜곡 보도 중단 △ 주민 건강진단 주기적 실시 △ 방사능 계측기 설치 등이 그것이다.

또 원자력발전소의 고장이 빈번하게 일어나자, 주민들의 불안감과 불만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북면 주민들은 1989년 5월 11일에 동력자원부, 과학기술처 및 한전에 11개 요구사항을 담은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다음은 이들이 정부에 요구한 청원서이다.³²

· 원자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주민들의 당면 문제 해결[식수 및 농업용수 고갈 및 상수원 오염]

- 원자력발전소 사고 시 대피계획 수립
-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에 설치한 방사능 감지기 증설 및 작동사항의 공개
- 지역주민 학계, 언론계, 각 사회단체로 구성된 감시단의 구성
- 원자력발전소에 관한 정보 및 제반 사항의 공개
- 원자력발전소에 관심이 있는 학계 및 언론계, 정계, 각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대토

론회 개최

- 후속기 유치 시 주민여론 수렴
- 울진원자력발전소 내 핵폐기물 보관장 건설의 즉각 중지
- 핵폐기물 처분장의 울진군 내 설치 반대
- 방사능 검진 전문의로 기관 설립 및 주민 정기 검진
- 위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중지하여 줄 것

이 무렵부터 울진지역 사회단체와 자생 단체를 중심으로 핵폐기장 문제가 지역사회 이슈로 본격 등장하는 단초를 보여준다. 이들 생대위의 요구사항에서 확인되듯 ‘방폐장 시설 반대’가 가장 먼저 제시되어있는 것으로 미루어 주민들은 방폐장 시설을 원전보다 더욱 위험하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1. 울진군, 2001, 위 책, 458쪽

32. 울진군, 2001, 위 책, 459쪽

그러나 당시의 반대 운동은 울진군 전역으로 확산되지는 않았다.

2) 핵폐기물처분장 설치 및 원전 후속기 건설 반대 북면 면민 궐기대회

생대위를 중심으로 울진주민들이 직접적인 행동에 나선 것은 정부가 1989년 8월 울진에 원전3·4호기 추가 건설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이다.³³ 그리고 핵폐기물 처분장의 1, 2순위로 선정되었던 영덕군에서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 반대 운동이 격렬하게 진행되자 생대위는 울진군 내의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반대하기 위한 본격적인 대규모 운동에 돌입했다.

이는 8월 26일 주민 약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생대위 주최로 부구초등학교에서 열린 ‘핵폐기물 처분장 설치 및 후속기 원전 건설 반대 면민 궐기대회’로 나타났다. 이날 주민들은 “핵폐기장 설치마라, 죽은 조상 치를 떠다”, “주민생존 위협하는 핵발전소 결사반대”, “원전 만도 억울한데 핵폐기장 웬말인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원자력발전소 정문까지 평화적인 거리 행진을 벌였다. 이날 대회에서 제기된 쟁점은 추가 원전건설의 반대와 핵폐기물 처분장의 건설 반대, 그리고 방사능 방재 훈련에의 주민참여 등이었다. 이날 대회는 울진군에서 일어난 최초의 대중집회였다.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 가는 가운데 방사능 피폭 의혹 사건이 계속 일어났다. 면민대회 직전 1989년 6월에는 영광원전 근무자의 부인이 뇌가 없는 태아를 유산하였고, 1989년 10월에는 울진원자력발전소의 근무자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방사능 피폭 의혹사건이 발생하였다.³⁴ 물론 한전은 당사자가 방사선 관리구역 내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피폭량 또한 없으므로 사인은 방사능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고조되었다.

한편 울진지역 어민 200여 명은 1990년 6월 5일 원전의 냉각수 방출과 방파제의 보안등 설치가 어장에 영향을 끼쳐 어획고가 줄고 있다며 피해조사 및 10억 원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울진원자력발전소 측은 해양연구소 등의 전문기관에 현지 조사를 의뢰하였다. 조사 결과 어류는 보안등과 관계없이 야간에 해안으로 이동하는 습성이 있다며, 보안등의 영향이라면 인접 해안에도 유사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나 그렇지 않고, 다만 어장의 위치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피해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³⁵

그러나 방사능 피해 의혹사건은 계속 일어났다. 1989년 10월에 북면에서 생식기가 없는 기형 송아지가 태어난 데 이어, 1990년 5월 다른 두 집에서 양 앞다리가 작은 기형 송아지와

33. 울진군, 2001, 위 책, 460쪽

34. 울진군, 2001, 위 책, 460쪽

35. 『한겨레신문』 1990년 6월 6일 ; 동력자원부·한국전력공사, 1991, 『원자력발전백서』, 215쪽

주민들은 1986년 원전이 들어서면서 원자로를 냉각한 뒤 초당 120억 톤씩 냉각수를 흘려보내는 물 때문에 바다 수온이 평균 18~20도로 정상 수온보다 섭씨 3도가량 높아 마을 앞 32ha에 이르는 정치망의 어장 어획량이 5년째 줄어든다고 밝혔다.

입을 다물지 못하는 기형 송아지가 태어나 각각 생후 11일과 20여 일 만에 죽었다.³⁶ 이를 계기로 생대위는 원전 주변에 있는 축산농가의 기형 송아지의 발생에 대한 역학 조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한전에 제출하였다. 이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조사반을 파견하여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원전에서 방출된 방사성물질의 영향은 아니라고 밝혔다. 물론 주민들은 이를 신뢰하지 않았다.³⁷ 또한, 1990년 7월 6일 울진원자력발전소의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간암으로 사망하였는데, 그는 1989년 12월부터 한전보수 노동자들의 작업복 세탁을 맡은 뒤 1990년 6월 원자력병원에서 간암 진단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방사능 피폭이 그 원인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하였다.

그러나 1990년 7월 19일 원자력위원회는 제225차 회의에서 한전이 제출한 울진 3·4호기 건설계획을 의결하였다.³⁸ 이 사실이 알려지자 생대위는 1989년 10월에 있었던 신규원전건설사업 토론회에서 원전의 추가건설 계획이 있을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한 약속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울진 3·4호기의 건설계획이 확정된 것에 대해 울진원자력발전소 측의 입장과 향후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울진원자력발전소 측은 신규원전의 건설 추진계획은 사업이 확정 시행될 때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본 부지공사 시행 전에 지역협력사업을 포함한 건설 전반에 걸쳐 주민여론 수렴을 위한 제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3) 울진반핵운동청년협의회와 사회단체의 연대 활동

원전이 소재한 북면 지역에서 생대위가 결성된 같은 해인 1989년 2월, 울진읍에서 반핵을 표방한 ‘울진반핵운동청년협의회[이하 반핵청년협의회]’가 조직되었다. 지역출신 남상민을 중심으로 조직된 반핵청년협의회는 지역 사회 단체인 한겨레신문후원회, 민주교육추진울진교사협의회(이하 울진교사협의회), 울진군농민회, 청년회 등과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반핵운동을 전개하였다.

반핵청년협의회는 “핵과 반생명적인 제 구조 일체를 추방하여 건강한 삶의 틀을 만드는 것”을 조직 목적으로 내고 △ 원자력발전소의 추방을 위한 주민운동 등의 전개 △ 지역에서 발생하는 반(反)생명·반(反)민주적구조에 대한 조사 및 철폐작업 △ 반핵 유관단체와의 연대 △ 민중·민주단체와의 연대 등을 활동 방향으로 제시하였다.³⁹

당시 반핵청년협의회의 활동은 주로 주민들에게 핵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에 치중하였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사동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반핵 홍보였다. 1986년부터

36. 울진군, 2001, 위 책, 461쪽

37. 울진군, 2001, 위 책, 461쪽

38. 『한겨레신문』, 1990년 7월 20일

39. 울진군, 2001, 위 책, 462쪽

사동에서 대규모 항만 공사가 진행되자, 주민들은 이 공사가 핵폐기물 처분장으로 오는 폐기물을 수송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이에 반핵청년협의회는 주민들에게 반핵 비디오를 상영하면서 핵의 위험성을 알리고, 또 핵폐기물처분장의 입지가 결정되기 전에는 울진지역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동항의 건설을 막아야 한다고 홍보하였다. 그리고 8월에는 수산청에 사동항의 공사가 핵폐기물 처분장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기도 하였다.

반핵청년협의회는 주민 홍보작업과 아울러 핵폐기장 설치 반대 면민대회에도 참여하면서 반핵과 관련된 다른 지역이나 조직과의 연대 활동도 전개하였다. 이들은 당시 영덕에서 열린 핵폐기장 반대 집회에도 참가하였다. 또한, 전국 규모의 반핵운동 조직인 전국원자력발전소추방운동본부에 회원 단체로 참여하였다.

울진지역의 초기 반핵운동은 원전이 소재한 북면 부구리의 일부 주민들과 의식 있는 청년들이 운동을 전개하였지만, 주민들 사이에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조직이 울진군 전역에서 결성되었다.⁴⁰ 이 무렵 구성된 것이 울진읍의 애향 단체인 향지회의 주도하에 지역의 26개 사회단체가 참여한 환경보존회이다.⁴¹

환경보존회는 원자력발전소의 반대를 전면적으로 표방하지는 않았지만, 발기인 대회에서 “가동 중인 울진원자력발전소 1·2호기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핵폐기물 처분장의 건설 기도에 대한 대처로서 단체를 조직한다”라는 결성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환경보존회에 참가했던 단체들은 순수 민간 사회단체가 아니라 관변 단체 성격이 많아 조직상의 한계 등으로 특별한 활동을 하지는 못했다.

4) 울진원자력반대투쟁위원회 결성과 원전 3·4호기 건설 및 핵폐기장 설치 반대 운동[1991. 6~1994. 3]⁴²

원전 반대 운동이 울진군 전역으로 확산된 시기는 1991년 6월 무렵이다. 확산 계기 또한 정부의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방폐장 부지확보 정책이었다.

정부는 1991년 6월경, 울진지역에 원자력발전소 후속기 건설을 발표한 뒤 실제로는 은밀하게 방폐장 건설을 위한 주민 접촉을 시도했다. 이 같은 정부의 밀실 정책이 주민들에게 알려지자 정부에 대한 불신은 매우 빠르게 확산되었다. 당시 반대 운동은 울진JC와 후포JC 등 울진 지역의 청장년 상공인 단체를 주축으로 전개되었다.⁴³ 이들 지역 상공인들은 같은 해 7월 24일 ‘울진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핵폐기장 설치 반대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40. 울진군, 2001, 위 책, 462쪽

41. 울진군, 2001, 위 책, 462쪽

42. 아랫글은 2001년 간행된 『울진군지』상과 당시 지역신문인 『울진저널』 등을 참고하여 기술하였다.

43. 울진군, 2001, 위 책, 463쪽

방폐장 반대 투쟁을 위한 범군민적인 전열을 갖추게 된다. 이들은 투쟁위원회를 설치한 한 달여 뒤인 8월 17일에 울진읍과 후포리에서 동시에 대규모 시위를 전개한다. 당시 2천여 명 이상의 군민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시위는 경찰과 투석전을 벌이고 최루탄이 발사 되는 등 매우 격렬하게 진행됐다. 또 시위과정에서 부상자가 대거 발생하고 구속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투쟁위원회는 △ 울진지역 원전 추가건설 및 핵폐기장 건설계획 취소 △ 울진 원전 3·4호기 건설 즉각 중단 △ 원전 1·2호기 피해 보상 확대 및 피해사례 공개 등을 요구했다.⁴⁴

당시의 시위는 울진지역 반핵운동의 조직화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른바 당시 지역민들로부터 진보적 단체로 인식되어 온 ‘울진군 농민회와 울진 반핵운동청년협의회’가 이들 상공인 조직과 공식적으로 결합하면서 원전 반대 운동은 빠른 속도로 ‘학습화, 조직화’하게 된다. 또 이들 조직은 이 무렵부터 전국 공해추방협의회 등 전국 조직과 연대를 하면서 역량 강화에 나선다. 특히 이 무렵부터 전국적으로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로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원전 반대 운동의 중심은 지방의회, 투쟁위원회의 연대 조직으로 변화한다.

울진지역에서 원전 반대 운동이 집중화되는 두 번째 시기는 1991년부터 1993년 사이이다.

1991년 12월 27일, 정부는 울진군민들의 우려와 당시 김종권 국회의원의 ‘과기부 장관 울진지역 핵폐기장 후보지 제외 약속’에도 불구하고 울진지역을 포함한 전국 6개 지역을 핵폐기장 후보지로 전격으로 발표했다. 이러한 정부 발표가 있자 반대 투쟁위원회는 29일, 대규모 궐기대회를 전개한다.

1991년 6월 6일, 울진군에 2030년까지 17기의 원전이 건설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자⁴⁵ 주민들의 반핵운동이 다시 불붙기 시작하였다. 군민들은 각 읍·면에서 원전 추가건설을 반대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울진청년회의소[회장 주광진]와 후포청년회의소에서는 원전의 추가건설을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6월 29일에는 원자력발전소 추가건설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던 근남면의 근남청년회[가칭] 주최로 근남 농협 회의실에서 주민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포리 원전건설계획반대 결의대회가 열렸다.

7월 2일 후포청년회의소가 중심이 되어 다른 사회단체들과 함께 주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울진에서는 7월 18일 울진청년회의소를 중심으로 주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처럼 후포면과 울진읍에서 결성된 두 주비위원회를 바탕으로 7월 24일 울진군의 사회단체 80여 개가 참여한 울진원자력발전소건설 및 핵폐기장설치반대투쟁위원회[이하 반투위]가 결성되었다. 후포와 울진의 청년회의소 회장이 각각 남부와 북부지역 투쟁위원장 겸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이어 7월 23일에는 울진군의회가 원전 추가건설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44. 울진군, 2001, 위 책, 464쪽

45. 울진군, 2001, 위 책, 464쪽

반투위는 8월 17일 원전 반대 범군민궐기대회를 울진과 후포에서 동시에 개최하였다. 당시 북부 지역은 울진군청 앞 광장에서 울진청년회의소를 비롯한 30여 개의 사회단체 회원 등 약 3,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전 10시경부터 궐기대회가 열렸다. 궐기대회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참여는 더욱 늘어나 5,000여 명에 이르렀다. 대회에서 주민들은 “울진지역에 원전이 무더기로 들어서 82km에 이르는 동해안 관광지가 파괴되고, 어획량이 줄어들어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다음과 같은 5개 항을 결의하였다.⁴⁶

△ 우리 울진지역에 건설할 원자력발전소건설계획을 즉각 취소하라 △ 이미 건설이 시작되고 있는 울진 3·4호기 공사를 즉각 중지하라 △ 북면 원자력 1·2호기에 대한 피해 보상을 확대하고 피해사례를 공개하라 △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믿을 수 없으며, 고장 원인과 사례를 공개하고 만약의 사고 시 군민 대피 요령을 홍보하라 △ 우리 울진에는 원자력발전소의 추가건설과 핵폐기물 처분장의 건설을 허용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강행할 때는 어떤 대상과도 어떤 폭력과도 어떤 권모술수와도 군민 1인이 남을 때까지 결사적으로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궐기대회를 마친 뒤 주민들은 원전의 추가건설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며 가두시위에 들어갔다. 주민들은 7번 국도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였다. 오후 1시경에 차량 위에서 시위를 주도하던 북부지역 위원장 주광진이 경찰의 발포한 최루탄으로 차 위에서 떨어져 긴급 후송되자, 주민들이 흥분하여 경찰에게 투석하는 등 시위가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주민들은 최루탄 발사 명령자의 즉각 사과 및 경찰의 철수를 요구하였고, 경찰 쪽에서 이를 받아들여 시위는 겨우 진정되었다. 시위대가 시내로 들어오면서 일부 주민들은 경찰서와 지역 국회의원[김중권] 집에 투석하기도 하였으며, 군청 문을 부수고 군청에 들어가 농성을 벌였다. 이날 시위는 다시 군청 앞 광장으로 돌아와 마무리 집회를 가지고 해산하였다.

한편 남부 지역에서도 같은 날[8월 11일] 오전 10시, 후포면 및 온정면·평해면·기성면의 주민들을 중심으로 울진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핵폐기장 건설 결사반대 범군민 궐기 남부지역대회가 후포의 여객선터미널에서 열렸다. 주민 약 3,00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주민들은 대회에서 군민들이 총단결하여 원자력발전소 추가건설 계획을 전면 중지시키자는 결의를 다지며, 울진읍에서의 궐기대회와 같은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어 대회에 참가한 주민들은 50여 개의 만장과 피켓을 들고 ‘근조(謹弔) 울진’이라고 쓰인 상여를 앞세우고 가두행진에 들어갔다. 정오쯤에는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국도로 진출하

46. 울진군, 2001, 위 책, 464쪽

였다. 다시 경찰과 대치하던 중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하며 주민들을 해산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주민들이 격분하여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시위가 격화되어 7번 국도가 6시간 정도 차량 운행이 중단되었다. 오후 6시경에 울진에서 빠져나온 경찰의 지원병력이 재투입되면서 주민들은 해산하였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의 산발적인 시위가 밤 11시 30분경까지 계속될 만큼 이날의 시위는 격렬하였다.⁴⁷

8월 17일 울진과 후포에서 있었던 시위로 주민 30여 명이 연행되었다. 이에 22일 연행자의 가족을 비롯한 주민 200여 명이 경찰서 앞에서 “구속자 석방”과 “원전반대운동 탄압중지”를 요구하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그 결과 주광진 위원장 등 4명을 제외한 주민들이 석방되었다.⁴⁸ 이후 울진·후포청년회의소 회원들은 8월 17일 집회로 인하여 구속된 후포 지역주민 2명에 대한 석방 청원 길거리 서명 활동을 벌였다. 9월 12일 반투위 대표단은 동력자원부 장관을 면담하였다.

대표단이 주민들의 원전 추가건설을 반대하는 입장을 전하자, 동력자원부 장관은 울진군에는 기존의 울진원자력발전소 2기를 포함하여 총 6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3·4호기는 1992년 5월에 착공할 예정이고 산포리와 직산리 2곳의 예정지도 국가전력 수급계획에 따라 건설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투위는 9월 19일 투쟁위원 100여 명이 모여 총회를 갖고 마스크를 통한 반대 홍보, 군민 총궐기 집회, 학생들의 등교 거부 등 모두 8가지의 투쟁방안을 마련하였다.

9월 28일에는 각 지역의 반투위 관계자 50여 명이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군·도의회의원들과 함께 원전 추가건설 반대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와의 토론회를 주선하기로 하고 끝을 맺었다.

10월 7일에는 울진의 민중당 지구당에서 창당 1주년 기념행사로 개최한 울진원전건설반대 및 강연회가 있었다. 10월 25일에는 반투위가 임시회의를 열고 지난 10월 11일 도·군의원 13명이 동자부장관과 가졌던 면담 내용을 보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다.

한편 1991년 11월 5일 서울에서는 전국원자력발전소 핵폐기장 반대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여기에서 반투위 대표로 참석한 반투위 부위원장이 전국 조직의 4인 공동의장 중 동해권 의장으로 선출되었다.⁴⁹

1991년 11월 7일에 다시 반투위 총회가 열려 향후 운동의 투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때 일부에서 울진 원전 3·4호기 건설은 국가전력의 필요성과 국제간 건설계약이 종료된 점, 그리고 최근 불법 집단 농성자에 대한 강경 대응이라는 정부 방침을 이유로 3·4호기는

47. 울진군, 2001, 위 책, 465쪽

48. 울진군, 2001, 위 책, 465쪽

49. 울진군, 2001, 위 책, 467쪽

인정하고, 5·6호기와 산포리와 직산리에 건설될 후속기는 막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는 달리 3·4호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5·6호기 및 산포리, 직산리의 후속기도 막을 수 있으며, 그 대안도 받아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었다. 결국, 도·군의회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제기한 3·4호기 인정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3·4호기 건설반대운동을 계속 전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반투위는 총회 결의에 따라 11월 22일의 군민궐기대회를 대비하여 깃발 등을 제작하고, 이를 울진읍내와 근남, 원남[현 매화] 지역 도로변 건물에 게양하였다. 하지만 이 원전반대 깃발은 환경 미관을 이유로 행정당국이 수거해 버렸다. 11월 22일에는 반투위에서 개최한 울진군 원전건설 반대 2차 궐기대회가 있었다. 주민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원전 건설 반대 경과보고를 겸한 이 날의 궐기대회는 옥외집회를 계획하였으나 집회 허가가 나지 않아 옥내 행사로 개최되었다. 대회를 마친 뒤 주민들은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실내체육관까지 평화적인 시가행진을 끝으로 자진 해산하였다.⁵⁰

11월 30일에는 그동안 과학기술처에서 핵폐기물처분장의 건설 후보지 선정 작업과 관련하여 서울대에 의뢰한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선정 및 지역지원에 관한 연구’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려던 계획이 연구발표회장[서울 프레스센터]에 몰려든 후보 지역의 주민 60여 명의 저지로 무산되었다. 특히 울진에서는 이 연구 결과에서 울진지역이 제1 후보지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여 강한 거부감을 가졌다.

이어 12월 4일에도 과학기술처가 울진읍 사무소 회의실에서 군민에 대한 원전 관련 설명회를 가지려고 계획하였으나, 반투위가 12월 3일 반투위의 회의에서 4일 군민에 대한 설명회를 실력으로 저지하려 하자 무기 연기되었다.

울진지역 반핵운동은 정부가 1991년 12월 28일 울진지역을 핵폐기물 처분장 후보지로 발표하면서 다시 불붙었다.⁵¹ 핵폐기물 처분장의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시위는 발표가 있는 다음 날인 12월 29일부터 해를 넘긴 1992년 1월까지 연일 계속되었다. 12월 29일 주민 1,500여 명은 오후 1시부터 군민회관 앞에 모여 집회를 가지고, 가두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시위 도중 월변교에서 경찰과 충돌하여 시위는 강제 해산되었으며, 주민들은 천주교 울진교회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30일에는 다시 1,000여 명의 주민들이 궐기대회를 마치고 격렬한 가두 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도중 주민들의 투석으로 군청, 파출소의 유리창이 파손되었으며, 주민 28명이 연행되었다.⁵² 그리고 이날 밤 9시경에 정전이 되자, 일부 주민들이 한전 울진변전소에 화염병을

50. 울진군, 2001, 위 책, 467쪽

51. 울진군, 2001, 위 책, 468쪽

52. 울진군, 2001, 위 책, 468쪽

던져 사무실이 전소되기도 했다.⁵³ 이날 밤 11시에는 천주교 울진교회에 경찰이 진입하여 농성 중인 주민들을 강제 해산시키고, 주민 24명을 또 연행해 갔다.⁵⁴

이튿날인 31일부터는 반투위 위원 3명이 삭발 농성을 시작하였으며, 시장의 부녀자들까지 시위에 가담하였다. 주민들은 29일과 30일의 반대 시위과정에서 경찰의 시위진압으로 여러 사람이 다치는 사태가 발생하자, 핵폐기장 건설계획의 전면 백지화와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의 추진 당국인 과학기술처 장관의 퇴진을 주장하고 폭력진압의 책임을 물어 내무부 장관의 퇴진과 울진 경찰서장의 즉각 파면 구속을 요구하였다. 해가 바뀐 1992년 새해 첫날에도 주민들의 시위는 계속되었다. 낮 12시 20분부터 가두행진이 있었으며, 오후 3시에 다시 주민 1,200여 명이 참가한 2차 시위가 있었다.

1월 2일에도 오후 12시와 2시에 1,000여 명의 주민들이 참가한 두 차례의 가두시위가 전개되었다. 또한, 천주교 안동교구 사제단이 경찰이 성당에 진입하여 주민들을 연행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⁵⁵ 이어 1월 3일에도 주민 600여 명이 참가한 시위가 계속되었으며, 울진군 의회 의원들은 김진현 과학기술처 장관을 면담하기 위해 상경하기도 하였다. 1월 4일에도 주민 1,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천주교 울진교회에서 집회를 갖고 가두행진에 들어갔다. 또한, 기성면에서도 시장 공터에서 꺾기대회를 가진 뒤 가두로 진출하여 시위를 벌이다 척산리 농협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며 경찰과 대치했다. 다음날에도 계속해서 울진읍에서 상여를 앞세운 채 2,300여 명의 주민이 가두시위를 벌였으며, 오후 4시경에 초등학교 앞에서 화형식을 가졌다.

이처럼 울진에서 핵폐기물처분장 설치를 반대하는 시위가 격렬하게 전개되자, 과학기술처 장관은 주민들의 동의가 없다면 울진에 핵폐기물 처분장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⁵⁶ 그러나 5일 반투위는 과학기술처장관의 말을 믿을 수 없으며, 이는 군민들의 투쟁 열기를 희석시키려는 술책이라고 주장하고, 계속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1월 6일에는 군의회에서 과학기술처 장관을 면담한 내용을 보고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자, 반투위는 이를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군의원들은 과학기술처 장관을 면담한 결과, 과학기술처로부터 핵폐기물 처분장의 후보지 선정기준은 ① 핵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하려는 지역의 주민 동의와 지역개발자금을 지원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하며, ②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어 있지 않은 지역 등이라고 밝히고, 울진군은 유치하려는 주민들의 요청이 없으므로 대상지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투위는 울진지역이 핵폐기물 처분장의 후보지가 아니라면 울진지역 주민들의

53. 울진군, 2001, 위 책, 468쪽

54. 울진군, 2001, 위 책, 469쪽

55. 울진군, 2001, 위 책, 469쪽

56. 울진군, 2001, 위 책, 469쪽

반대 운동이 있기 전에 울진 지역이 후보지가 아니라는 점을 밝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장표명이 없었으며, 더구나 주민들의 반대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현재에도 언급이 없는 것은 모순된다고 정부 측의 견해를 반박하였다. 이어 오후에는 비가 오는 가운데 천주교 울진교회 앞에서 주민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규탄대회를 갖고, “과학기술처 장관 퇴진”을 촉구하며 가두시위를 벌였다.

1월 7일에는 천주교울진교회에서 공해추방운동연합 의장의 초청 강연을 들은 뒤 안동문화운동연합 소속 노래패 ‘햇살’과 풍물패 ‘등근’을 앞세우고 울진군청, 울진시장 일원에서 시위를 전개하였다. 울진지역에서는 1월 8일에도 주민 500여 명이 참가한 두 차례의 가두시위가 계속 이어졌고 9일에는 주민 1,500여 명이 죽변 면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가지고 가두시위를 벌인 뒤 해산하였다.

이후 반투위는 반대 운동을 울진 전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각 지역을 번갈아 가며 집회를 개최하였다. 1월 10일 근남면에서 주민 1,000여 명이 참가한 시위가 전개되었으며, 11일에는 원남면[현 매화면]에서 700여 명이 참가한 시위가 있었으며 12일에는 북면에서 주민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가졌다. 13일에는 기성면에서 3시간 동안 사동국도 삼거리에서 건설 중인 사동항까지 가두 행진을 벌였다. 1월 16일에는 주민 1,000여 명이 울진군 민회관 앞에서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설치 반대를 요구하며 시위하였다. 이때까지 주민들이 가진 반대 시위는 총 21회에 달하였다.⁵⁷

1월 25일에는 주민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22차 군민권기대회가 있었다. 이날 대회는 원전 추가건설 및 핵폐기물 처분장 설치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반투위 위원장 주광진과 부위원장 오계동, 임원식이 1991년 12월 29일 이후 그동안 천주교 울진교회에서 해오던 농성을 끝내고 경찰에 자진 출두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주도한 것이었다.⁵⁸

반투위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 3명이 경찰에 자진 출두하여 구속된 이후 1월 27일부터 이들의 석방 운동이 지속 전개되었다. 1월 28일에는 반투위 관계자와 주민 300여 명이 대구지검 영덕지원 정문 앞에서 시위와 관련된 구속자의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한편, 울진군의회는 1992년 1월 20일에 동력자원부와 과학기술처 장관에게 보내는 서면 질의서와 대 군민호소문을 채택하고 과기처에 발송했다. 아래는 당시 군의회가 채택한 건의문 내용이다.

△ 울진군 관내에는 핵폐기장이 설치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공식 보도해줄 것 △ 위
1항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발표하는 선정기준 3항 이외, 이미 원전가동지구에는 설치하

57. 울진군, 2001, 위 책, 470쪽

58. 울진군, 2001, 위 책, 470쪽

지 않는다는 내용을 언론에 보도해 줄 것 △ 위 1·2항의 실행이 불가능할 시는 공문으로 대상지가 아니라는 내용을 본 의회에 회신해 줄 것

2월 8일에는 울진원전 및 핵폐기장 설치반대 제23차 군민궐기대회가 주민 6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1991년 11월 22일의 집회 이후 군의회 의원들이 처음으로 다시 참석하여 반투위와의 공동투쟁을 선언하고, 공동결의문을 발표하였다. 다음은 공동결의문이다.

△ 우리 울진지역에 건설할 3·4호기 공사를 즉각 중지하고, 추가 발전소 건설계획을 전면철회하라 △ 울진을 핵폐기물 처분장 후보지에서 즉각 철회하라 △ 경찰은 강경진압과 무차별연행에 대해 사과하고, 정부 관련 책임자는 사퇴하라 △ 동력자원부, 과학기술처 장관은 구태의연한 사업시행 방침으로 울진을 혼란에 빠뜨린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 이 운동을 하다 구속된 8명의 구속자는 아무 죄가 없다 △ 우리 울진에는 이미 원전 1·2호기만으로도 위험을 안고 있다. 추가 원전 건설과 핵폐기물처분장 후보지를 강행한다면 울진군민의 죽음을 무릅쓴 항쟁을 받을 것이며, 우리 군민은 어떤 경우라도 이 의지를 굽히지 않고 결사적으로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주민들은 집회를 마친 후 군민회관을 출발하여 평화적인 가두시위를 벌인 뒤 자진 해산하였다. 이어 구속된 주민 가운데 4명이 2월 12일과 17일에 석방되자, 주민들은 이들을 환영하는 시가행진을 하였다. 그리고 22일에는 주민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석방자들의 환영대회를 겸하여 제24차 원전 및 핵폐기장 설치반대 군민대회가 열렸다.

한편 3월 24일의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국면에 돌입하자, 반투위는 구속자 석방을 위한 서명운동은 계속해서 추진하되,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궐기대회 등의 각종 집회를 자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동안의 반핵 활동을 평가받고 제도권에서 반핵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구속 중인 반투위 위원장의 옥중출마를 검토하였으나 무산되었다. 그 대신 반투위는 그동안 주민들의 운동에 소극적 또는 대립적인 태도를 보였던 현직 여당 국회의원 김중권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암묵적으로 전개하였다.⁵⁹⁾

한편 3월 9일에 구속된 주민 중 1명이 가석방되고, 30일에는 2명이 집행유예로 석방됨으로써 구속된 사람은 모두 풀려 나와 3월 31일에 환영대회를 갖고, 앞으로 원전 추가건설 및

59. 울진군, 2001, 위 책, 473쪽

핵폐기장 설치 계획이 백지화될 때까지 평화적인 시위를 계속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후 반투위는 4월 11일에 집행유예로 석방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보호하기 위해 집행부로서의 활동을 잠정 중단하도록 하고 위원장 대행과 5명의 부위원장단 체제로 개편하였다.

이어 4월 28일에는 울진군청 앞 광장에서 울진원전 3·4호기 및 핵폐기물 처분장 설치 반대와 아울러 소련 체르노빌 참사 6주년 추도식을 겸한 전국 집회를 가졌다. 주민 300여 명과 전국 각 지역의 반핵 및 환경운동단체가 참여하였다. 울진주민들의 2년에 걸친 반대 투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주민들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5월 27일 울진 3·4호기의 기공식을 가졌다.⁶⁰

반투위는 기공식 당일 주민 300여 명과 함께 발전소 정문과 후문에서 노인들을 태운 버스 20여 대를 되돌려 보내고 울진 3·4호기 건설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3·4호기 철회 등의 구호가 적힌 상여를 매고 원자력전시관까지 행진한 뒤 원전 정문 앞에서 상여 화형식을 하고 자진 해산하였다.⁶¹ 1992년 5월 27일의 집회를 끝으로 해서 주민들의 반핵운동은 1994년 4월 기성면에서 핵폐기물처분장의 유치신청을 낼 때까지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이 무렵 원전 반대 운동은 초기 원전건설로 인한 주민 생존권 확보 성격의 투쟁에서 울진 지역이 핵폐기장 후보지로 공식 확정되면서 대규모 생태 운동과 정치투쟁으로 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1992년 실시된 3.23 총선에서 이 지역의 유력 정치인이자 당시 집권당인 민자당의 실세였던 3선 의원인 김종권 의원이 일선 경찰서장 출신의 이학원 씨에게 고배를 마시는 정치 이변을 낳았다.

<표 16> 핵폐기물 처분장 설치 반대 운동

일자	주관조직	장소	참가인원	집회 및 요구사항, 기타
1991. 12. 29	울진 원전 반투위	군민회관 앞 광장	약 800~1,500	핵폐기물처분장 설치 반대 군민대회 핵폐기물 처분장 후보지 지정 철회 요구, 주민 28명 연행
12. 30	〃	울진읍내	500~ 1,500	반투위 임원 식발, 〃
12. 31	〃	울진읍내		〃
1992. 1. 1	〃	천주교회 앞	1,200	핵폐기장, 핵발전소 건설저지 범군민총궐기대회
1. 2	〃	울진읍내	1,000	〃
1. 3	〃	울진읍내	600	〃
1. 4	〃	울진읍내, 기성면	1,700~2,200	〃
1. 5	〃	울진읍내		〃

60. 울진군, 2001, 위 책, 473쪽

61. 울진군, 2001, 위 책, 474쪽

일자	주관조직	장소	참가인원	집회 및 요구사항, 기타
1. 6	//	천주교회 앞	300~800	//
1. 7	//	울진읍내		//
1. 8	//	울진읍내		//
1. 9	죽변면 주민	죽변면사무소	1,200	핵폐기물 처리장 설치 반대
1. 10	근남면 주민	성류굴 입구	800	//
1. 11	원남면 주민	매화장터	700	//
1. 12	북면주민	북면시장	400	//
1. 13	기성면 주민	사동 국도		//
1. 14	평해읍 주민	평해읍		//
1. 16	반투위	울진군청 앞		//
1. 22	죽변면 주민	죽변면사무소		//
1. 25	반투위	천주교회 앞		제22차 군민궐기대회, 반투위 위원장, 부위원장 경찰에 자진출두
1. 28	//	영덕지원 앞	300	구속자 석방 요구
2. 8	//	군민회관 앞	600	23차 군민궐기 대회
2. 22	//	군민회관	500	구속자 석방 환영대회
3. 31	//			구속자 석방 환영대회
4. 26	//	군청 앞	300	원전 핵폐기장 설치반대
5. 27	//	북면 원전 앞	300	34호기 건설 반대

2회에 걸친 대규모 시위로 핵폐기장 건설 문제와 원전 추가건설 문제는 울진지역 사회 갈등의 중심이자 핵(核)으로 자리를 잡았다. 특히 두 번의 대규모 시위를 통해 양산된 구속자와 같은 시기에 진행된 지방자치제 실시,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뒤늦은 정보 확산 등은 원전 반대 운동의 성격을 정치적, 생태 운동 차원으로 변화시켰다.

또 원전 운동이 생태 환경운동으로 전개되면서 군민들 사이에 환경 인식이 매우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주민 인식변화는 이후 원전건설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이슈를 생산하게 된다.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요구와 온배수 배출 등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저감책 요구 등이 그것이다.

2. 2차 핵폐기장 설치 반대운동

1) 기성핵폐기물처분장 유치 반대운동[1994. 3~1994. 12]

울진지역의 대규모 시위는 1994년 1월에 또다시 발생한다. 발생 요인 또한 종전과 같은

핵폐기물처분장 갈등이다. 당시 또 한 차례의 대규모 시위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계기는 ‘기성면 일부 주민에 의한 핵폐기장 유치신청 사건’이다. 당시 반대운동의 전개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⁶²

□ 94년 2월 초순 : 과학기술처간부가 평해읍모처에서 기성면에 거주하는 안00씨와 조00씨 등과 방폐물처분장[이하 방폐장] 유치 문제를 논의하고 기성지역 다방과 식당 주변에 관련 유인물을 배포함.

□ 2월 17일 : 울진군원전반대투쟁위원회[이하 반투위]가 기성면 유치자들을 만나 설득작업 수행. 기성면청년회가 대책위원회의 결성을 종용함.

□ 3월 초순 : 유치 추진위 측 활동 정보를 입수한 지역 청년들이 청년회를 소집, 기성핵폐기장반대대책위를 결성하기로 의견을 모음.

□ 3월 7일 : 기성면 척산리 소재 복지회관 2층에서 기성면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면민토론회’를 개최, 유치측 인사들의 불참으로 무산.

□ 3월 13일 : 과기처 사무관이 유치자 10여 명을 마을회관에 모아놓고 공청회 개최를 시도했으나 반투위와 기성면청년회가 봉쇄.

□ 3월 16일 : 기성면핵폐기장대책위[위원장 황재규, 이하 대책위]를 구성, 홍보물 발행 및 집회 준비 돌입.

□ 3월 18일 : 울진군의회와 대책위가 간담회 개최, 유치 추진 움직임에 대한 의견 교환 및 대책 논의.

□ 3월 22일 : 핵폐기장반대 1차 서명운동 전개. 거리 방송 및 홍보물 배포.

□ 3월 30일 : 대책위가 ‘핵폐기장건설반대 투쟁소식’1호 발간.

□ 4월 11일 : 핵폐기장 건설반대 1차 기성면민대회 개최. 삭발식, 거리 시위.

□ 4월 14일 : 유치자들이 기성면 마을별로 방문, 세대당 3~5천만 원씩 지급한다며 유치 서명 작업 추진. 그린피스 울진 방문. 반투위, 울진원전 앞 광장서 ‘핵발전소, 핵폐기장 반대 군민결의대회’ 개최.

□ 4월 17일 : 기성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군의회 주재로 찬반토론회 개최. 유치측은 지역개발론을, 반대측은 위험론을 주장.

□ 5월 2일 : 후포반투위 주관으로 핵폐기장 반대 집회. 주민 3천여 명 참석. 반대 거리 방송 실시.

□ 5월 6일 : 세대별 3~5천만 원 지급설과 관련, 과기처에서 ‘지급 약속한 바 없다’라

62. 아래의 일자별 진행 과정은 『울진저널』; 김명숙, 『정치 항의의 원인과 과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5을 참고로 정리하였다.

는 내용의 답변서 보내옴.

□ 5월 11일 : 대책위 위원장 등 8명 과기처 방문. 기성주민 1,800여 명의 반대 서명부 제출.

□ 5월 16일 : 유치준비위원회가 주민 2,070명의 연대 서명을 받아 유치 신청서 제출

□ 5월 17일 : 울진군의회, 주민 3만 명 서명운동 돌입.

□ 5월 19일 : 과기처 원자력정책관 최홍식 울진 방문. 반투위와 유치 관계자를 면담한 뒤,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함.

□ 5월 20일 : 최홍식 과기처 정책관, 군수 면담 후 군의회 방문. 과기처 직원들의 유치위 접촉을 반투위가 봉쇄.

□ 5월 22일 : 정부에서 94년 연말 경 폐기장 건설지역 선정 방침 발표. 과기처는 부지선정에 따른 반발 최소화를 위해 지역숙원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지원, 주민 취업 보장 등을 위한 관계법의 시행을 위한 마무리 작업 중임을 발표. '주민 중 일부가 반대하더라도 공권력을 투입, 강행할 것임'을 밝힘.

□ 5월 24일 : 과기처, '울진군민들이 자발적으로 핵폐기장을 유치했다'라고 공식 발표. 같은 날 KBS 저녁 9시 뉴스를 통해 '기성면 주민 57%가 핵폐기장 유치신청을 했다'라고 보도. 같은 날 군의회는 '과기처가 주민들에게 유치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야간 호별 방문을 했다'라고 정부측의 부도덕성을 비난.

□ 5월 25일 : 울진군의회, 핵폐기장후보지로 울진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사퇴 및 의회 해산기로 결의. 반투위, 5월 30일 군의회와 공동으로 범군민궐기대회 개최 결정.

□ 5월 26일 : 동아일보 사설 '핵쓰레기와 주민자율권'에서 '울진군 기성면 주민 2천여 명이 연대 서명으로 과기처에 핵폐기장 유치신청을 냈다'라고 보도하면서 '이는 참신한 충격으로 주민자율권의 산물'이라고 주장.

□ 5월 27일 : 울진군의회, 반투위, 대책위, 과기처장관 방문. 2만5천여 명의 반대 서명부 제출. 김시중 과기처 장관, 면담 자리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을 것임'을 밝힘.

□ 5월 28~29일 : 울진군의회와 반투위를 중심으로 '울진군핵폐기장반대 범군민대책회의'를 구성하고 150인 규모의 소위원회 설치. 같은 날 후포청년회 주관으로 후포정류장 앞 7번 국도 기습점거, 연좌 농성 돌입. 기습점거 청년회원 연행. 초·중·고등학생 500여 명 밤늦게까지 경찰과 대치.

□ 5월 30일 : 범대책위, 군청 앞 광장서 군민궐기대회 개최. 주민 8천여 명 집결. 31일부터 등교 거부, 이장 총 사퇴기로 결정. '핵폐기장 설치 불가와 원전3·4호기 건설 중단 촉구'를 담은 건의문을 대통령에게 발송. 군민들이 지역별로 산개하여 7번국도 점

거, 봉쇄. 이날 24명이 연행되고 9명이 중경상을 입음. 군의원 10명 전원과 이장 90명이 사퇴함.

□ 5월 31일 : 울진군의회, △ 4기의 원전에 이은 추가건설 취소 △기성면 일부 주민의 유치 신청서 백지화 △ 핵폐기물관리사업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법 조기 제정 △ 서울대 인발연에서 발표한 방폐물 유치대상 6개 후보지 백지화 등을 담은 대정부 요구서를 과기처로 발송. 같은 날 반투위위원장 임원식, 경찰서장 면담 요청기 위해 경찰서로 가던 중 연행됨.

□ 6월 1일 : 반투위 위원장 임원식 구속으로 백봉기가 위원장 직대로 선임됨. 읍면별 자율적 투쟁 지속됨. 1만여명의 초·중·고등학생이 등교 거부하고 거리로 나섬. 경찰서 앞에서 학생들이 위원장 석방을 요구하며 연좌시위. 울진경찰서 임원식 위원장 석방.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과기처 ‘울진지역 일부 인사들이 유치신청을 했으나 제 여건을 감안하여 설치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전언통신문을 발표.

반투위, ‘군민에게 드리는 글’을 채택, ‘시위 자제’를 당부. 그러나 구속자와 연행자가 전원 석방될 때까지 평화적인 시위 계속 강행 밝힘

□ 6월 2일 : 과기처 장관이 ‘울진지역에는 핵폐기장을 건설하지 않겠다’라고 공식 발표.

범대책위는 곧바로 ‘수습대책위’로 전환하고 구속자 석방 운동, 부상자 돕기, 자금 모금 등에 돌입.

□ 6월 3일 : ‘투쟁속보 4호’ 발간, 울진핵폐기장반대시위 모두 중단.

다음은 기성면 핵폐기장 유치 반대운동 경과와 핵폐기장 설치 반대운동으로 구속된 주민 명단이다.⁶³

<표 17> 기성핵폐기장 유치 반대운동

일자	주관조직	장소	참가인원	집회 및 요구사항, 기타
1994. 4. 11	기성면 주민	기성면 시가지		핵폐기물처분장 설치 반대
5. 2	후포청년회의소	해안도로	약 1,000	//
5. 28	후포청년회의소	시외버스터미널	400~500	//
5. 28	반투위 등	군청회의실	145개 단체	범군민대책위원회 구성

63. 위 책 484쪽

일자	주관조직	장소	참가인원	집회 및 요구사항, 기타
5. 30	군의회,반투위 등	군민회관 광장	5,000~8,000	범시민 쉼기대회
5. 31	각 읍면 청년회	각 읍면 및 국도	3,000~3,400	//
6. 1	범군민대책위	북면원전 앞		유조차량 탈취, 포기 팩스 도착

<표 18> 울진핵폐기장, 원전건설 반대 운동 구속자

구분	성명	직책	읍면	비고
91년도 구속자	주광진(朱光鎭)	초대위원장	울진읍	징역 1년, 집유 2년
	김종만(金鍾挽)		울진읍	// 1.6년, // 2년
	이천숙(李天淑)		울진읍	// 6월, // 1년
	임상호(林相浩)		울진읍	// 6월, // 1년
	전광수(田光洙)		울진읍	// 6월, // 1년
	임태웅(林泰雄)		근남면	// 6월, // 1년
	임원식(任元植)	3대위원장	죽변면	// 1년, // 2년
	오개동(吳介東)		죽변면	// 10월, // 2년
	서수용(徐守龍)		후포면	// 10월, // 2년
	이춘근(李春根)		후포면	// 10월, // 2년
94년도 구속자	김남일(金南一)		울진읍	// 1.6년, // 2년
	김주복(金周福)		울진읍	// 1.6년, // 3년
	박성준(朴成俊)		울진읍	// 1.6년, // 3년
	유성찬(俞成燦)		울진읍	// 1.6년, // 2년
	장덕윤(張德允)		울진읍	// 1.6년, // 2년
	남기진(南基鎭)		북면	// 6월, // 1년
	남두호(南斗浩)		북면	// 1년, // 2년
	전득수(田得洙)		북면	// 1년, // 2년
	전중석(全仲錫)		북면	// 1년, // 2년
	김성곤(金成坤)		기성면	// 1년, // 2년
	임원식(任元植)		죽변면	// 1.6년, // 3년
	명기홍(明基洪)		죽변면	// 1.6년, // 3년
	김규환(金奎煥)		후포면	// 6월, // 1년
	홍석규(洪錫奎)		후포면	// 6월, // 1년
	김용덕(金容德)		후포면	// 6월, // 1년
	김정광(金正光)		후포면	// 6월, // 1년
	김영준(金永俊)		후포면	// 6월, // 1년

3. 원전 추가건설을 둘러싼 갈등 양상

1) 울진원전범군민대책위원회 출범과 원전 관련 법규 개정 투쟁

일련의 시간별 투쟁 경과를 통해 울진지역의 반핵운동은, 거시적으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주민의 불신감이 주요한 동인으로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 자치와 환경 인식의 진전에 따라 그동안 국가라는 틀 속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온 일련의 국책사업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감이 항의의 주요 동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울진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당시 울진주민들이 ‘핵폐기장 건설 불가’를 강력 한 수단으로 요구하게 되는 배경에는 ‘정부의 기피 시설 입지 계획의 반법치적 성격과 밀실 행정으로 지칭되는 일방적 정책 논리’가 매우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은 당시 울진주민들이 제출한 ‘대정부 건의서’에도 극명하게 드러나 있다.⁶⁴

예컨대 “울진지역에는 이미 4기의 원전이 건설되고 있음에 반해 또다시 주민 의사결정이나 참여 없이 핵폐기장 후보지로 지정”된 사실에서 주민들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 결정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울진지역 주민들을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깊은 소외론적 인식으로 몰고 갔으며 결국 이는 주민들의 집단항의 형태로 표출되었다.

특히 앞서 울진원전반대투쟁위원회가 ‘기성핵폐기장유치 반대 운동’을 통해 지속해서 요구해 온 ‘주민들의 유치신청서 백지화 요구’ 항목에서는 기성면 주민들의 유치신청 또한 주민 자율적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라 정부 측 인사들의 회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엿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으로 ‘관련 법규의 제정과 개정’을 요구한 점에서는 기피 시설과 관련한 지역개발의 논리가 법적 장치를 갖추면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결국, 주민들의 이러한 대정부 불신은 정부의 계획 논리의 미비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정부는 1978년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인 고리원전 1호기가 가동된 지 10년이 지나도록 방폐물처분장시설 문제를 방치해 왔다. 1986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방사성폐기물기금법’을 제정하고 폐기물처분장 건설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이는 전형적인 하향식 정책 논리를 전제로 하는 극히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조치에 불과한 것이었다.

과기처를 비롯하여 정부 당국이 핵폐기장 부지 선정과정도 일관되게 무사안일주의와 비공개 방식을 견지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정부의 정책접근 태도가 주민의 극심한 반발을 불

64. 『울진저널』, 1994년 2월 27일

러온 요인이다.

울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정책담당자들은 주민들의 자율적 의사 선택권을 박탈한 채 지역개발금과 보상금이라는 당근만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의 유치동의서를 받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결국, 이러한 정부의 탁상행정이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있던 대부분 주민까지도 반대의 물길 속에 편승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또한, 정부 관계자들이 원전시설의 안전성과 지역개발지원론을 강력하게 대두시키면서 주민들에게 접근했던 당초의 모습과는 달리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자 모든 이슈를 스스로 회피해버리는 등 정부의 일관성없는 행정력과 정책 부재가 주민들의 극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또 하나의 주요한 동인으로 확인된다. 결국, 일관성없는 행정은 곧바로 행정 불신으로 이어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주민 저항운동의 기저에는 정책적 이슈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정당성 요소가 자리를 잡고 있다.

예컨대 주어진 이슈가 사회적 규범의 범주 내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운동의 정당성은 배가되며 또 이는 운동의 성공률을 높여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울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원전시설이라는 기피 시설의 경우,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슈가 특수한 사회적 윤리 규범에 해당한다는 것임을 각인시키려는 노력이 수반된다. 이러한 타당화(validation) 노력은 저항행위의 전략적 목표 설정, 집단의 조직화, 동원화 등의 모습으로 진행된다.

실제 울진의 사례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울진군민들은 정부 정책에 저항하기 위한 사회적 정당성을 찾는데 매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울진주민들은 이들이 정부에 건의한 대정부 건의서에도 나타나 있는 것처럼 ‘기존의 원전이 4기나 건설·가동되고 있는 지역에 또다시 핵폐기장 건설과 추가 원전건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불공평한 처사이자 사회적 정체성을 흔드는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다.

울진주민들의 항의는 한마디로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하필이면 끊임없이 우리 지역이냐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정부 정책담당자들이 ‘이로운 것 없는 시설’이라는 주민들의 인식을 불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체화하고 가시화하지 않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주민들은 자신들의 집단적 항의 행위가 사회적 규범 속에서 엄연히 정당한 행위임을 제고하기 위해 집회를 통해 기피 시설의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공동체의 구성원들을 급속하게 결속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곧 핵폐기장이 들어오면 동해안의 해양생태계는 일거에 파괴되고 이는 결국 주민생존권의 훼손으로 이어진다는 위기감을 극대화하는 동인으로 작용한 셈이다.

정부는 이들 주민 인식을 둔화시키기 위해서 외국의 사례를 들어가며 핵폐기장의 안정성

을 강조하고 홍보했으나 이는 크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미 앞에서 지적했듯이 일방적 정책 결정과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일관성없는 행정력은 주민들의 불신감을 더욱 더 깊게 만드는 요인에 불과했다.

당시 주민 항의를 보도한 언론의 성격 또한 주민들의 집단항의를 정당화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울진지역의 지역 언론을 제외한 대다수 중앙언론은 주민들의 항의를 ‘집단적 님비 현상’으로 해석했다. 결국, 이러한 시각은 주민들을 고립화시켰으며 이는 내부 결속을 공고히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오히려 언론의 편향적 시각이 주민들의 집단항의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대목은 집단항의 전략이다. 운동의 전략은 운동의 성공 여부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울진 사례를 연구하고 분석한 일련의 보고서를 통해 울진지역의 집단항의는 전 과정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의지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⁶⁵

2) 민선 자치 시대와 울진원전범군민대책위원회 출범

(1) 울진원전범군민대책위원회 구성

울진 사례의 중심에 있는 ‘울진원전반대투쟁위원회’의 조직과정은 전형적인 민주적 가치에 그 기저를 두고 있다. 집단항의 기간 조직 내에서 어떤 권위주의적 리더도 드러나지 않았다. 특히 의사결정 과정은 세련되지는 못하지만 매우 정교한 민주주의적 방법을 통해 결정되었다.

곧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울진지역 주민들의 집단항의의 도덕성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음은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실제 이러한 지역민들의 인식은 이후 원전 문제 대응 방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이는 1995년부터 비롯되는 민선 자치단체장 시대 개막과 궤를 같이한다.

1994년 대규모 반대 운동 이후 1995년도에 본격적인 민선 자치체장 시대가 열리면서 울진지역의 원전반대운동도 시위 중심의 성격에서 협의체의 성격으로 전환된다. 이의 구체물이 ‘울진원전관련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이다. 대책위는 선출직 공직자인 울진군수와 울진군의회 의장, 원전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 등 3인을 공동대표로, 울진지역 사회단체 250여 개의 대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대책위 내에 국회의원과 도의회 의원, 군의원 등을 중심으로 실무위원회를 두고 이를 통해 원전 관련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당시 범대위 구성은 크게 두 가지 배경에서 출발한다.

하나는 1995년에 첫 시행된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출현이다. 첫 민선 자치단체장이 출

65. 남효선, 2002, 「기피 시설의 적응과 사회적 수용성-원전 사업을 중심으로-」『시민의 신문』

범하면서 울진지역사회에서는 지역사회 갈등의 핵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핵폐기장 설치와 원전 추가건설 문제 등 원전 사업 관련한 제반 문제와 사회적 갈등을 민선 단체장이 중심이 되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됐다. 또 이러한 여론은 울진군민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 배경에는 종전의 핵폐기장 설치 관련 주민주도의 반대 운동 과정에서 수십 명의 주민이 옥고를 치르는 등 희생이 따랐다는 점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때문에 민선 자치단체장이 군민의 실제적 대표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주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의원과 함께 원전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하고 또 군민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는 요구가 주민들 사이에 강하게 내재되어 있었다.

또 하나의 요인은 종전까지의 정부의 추진 방식에서 확인되듯 원전산업은 기존의 원전 시설이 소재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단화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경쟁력과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를 위해서는 원전 관련 제반 법규의 제정이나 개정 없이는 끊임없이 사회적 갈등만 양산될 것이라는 인식이 주민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범대위 구성에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한 것은 정부와 한전이 울진지역에 원전 5·6호기 건설을 일방적으로 결정, 발표하고 이의 법률적 절차인 ‘울진 원전 5·6호기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 개최를 위해 시행한 공고 절차의 불법성이다.

당시 한전은 공청회 관련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 공고를 시행자인 한전사장의 명의가 아닌 울진군수의 명의로 언론을 통해 공고했다. 이 점이 당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를 계기로 민선 첫 울진군수 취임 이후 지역사회 일각에서 논의되던 범대위 구성론이 수면 위로 급부상하게 된다.

당시 원전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인 임원식과 종전의 핵폐기장 설치 반대 운동에서 중심 역할을 해온 지역언론인 『울진저널』 발행인 남효선은 첫 민선자치단체장인 전광순 군수와의 면담을 통해 원전 5·6호기 건설 관련 범대책위원회 구성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역설하여 전광순 군수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다.

당시 전광순 군수와의 면담에서 논의된 사항은 △ 지역의 전(全)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범군민적 기구 구성 △ 범군민적 기구는 군수, 군의회의장, 반투위위원장 등 3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구성 △ 국회의원 포함 선출직 공직자와 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 구성 △ 범대위 중심으로 원전 5·6호기 공청회 등 제반 원전 문제 대응 △ 울진군 지자체의 범대위 활동 행정적 지원 △ 절차적 하자가 확인된 환경영향평가 절차 재이행 등이다.

이에 따라 울진군은 한국전력공사에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및 공청회의 재공고를 요구하

는 공문을 발송하고 한전 측은 법적 하자를 인정해 재공고 절차에 들어갔다.⁶⁶

이러한 논의를 거쳐 1995년 12월 4일 범대위 구성을 위한 1차 주민대표 소집 회의가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당시 1차 회의에는 이학원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전광순 군수, 김선이 군의장, 주기돈·정재화·김용수 도의원, 군의원 등 15명의 선출직 공직자와 반투위를 포함 90개 사회·직능단체, 10개 읍면별 청년회, 사회단체, 이장, 주민대표 등 368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민대표들은 기구 명칭을 ‘울진원전관련범군민대책위원회’로 정하고 전광순 군수, 김선이 군의장, 임원식 반투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 실무 간사에 지역 언론 대표로 참석한 남효선 울진저널 발행인을 선임하고 실무기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를 위임하였다. 이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⁶⁷

당시 선출직 공직자는 국회의원 이학원, 군수 전광순, 도의원 주기돈·정재화·김용수, 군의장 김선이, 군의원 장덕렬·임동술·이성우·황대운·장상용·이규선·김기현·정일순·방유봉 등이다.

같은 해 12월 12일 군청소회의실에서 범대위 2차 회의를 갖고 울진 원전 5·6호가 관련 군민의견수렴대회를 12월 17일 오후 2시 군청대회의실에서 열기로 의결했다. 또 실무위원회는 3인 공동위원장과 실무 간사, 선출직 공직자 등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하고 해당 공청회 질문자는 회장단에서 결정하기로 위임했다.

앞서 12월 6일 공동위원장과 실무 간사가 참여하는 실무진 회의를 갖고 해당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부실을 근거로 초안 보완과 공청회 등의 연기를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부실 근거를 확보 작업을 실무 간사에게 위임하였다.

실무 간사는 이에 따라 서울과 부산, 울산 등지의 해양학과가 개설된 대학교를 방문해 울진지역을 비롯하여 동해안의 해양생태계와 관련된 논문 등의 수집에 들어갔다. 또 원전 2기가 가동되고 2기가 건설되고 있는 북면과 죽변지역의 해양 환경 피해사례 수집에 착수했다.

당시 해당 법규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의견은 10건이 제출되었으며 울진군은 환경부와 경북도, 대구지방환경관리청의 의견을 포함해 한전에 제출했다.

같은 해 12월 17일 예정된 군민의견수렴대회가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295개의 지역사회단체가 참가하였다. 이 자리에서 남효선 실무 간사는 동해안의 해양 관련 석·박사학위 논문과 북면, 죽변면 지역의 해양 환경 피해사례 등을 중심으로 15개 항목의 초안 부실 내용을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범대위는 이를 근거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재작성을 요구하기로 의결하였다. 또 범대위 공동위원장 3인, 도의원 3인, 군의회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실무 간사 등 8인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고 향후 제반 문제 대응을 실무위원회에 위

66. 『울진저널』, 1995년 12월 4일

67. 『울진저널』, 1995년 12월 11일

임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어 12월 18일 울진군은 범대위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전 측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재작성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⁶⁸

당시 환경영향평가 초안 재작성 요구 근거로 제시된 부실 15개 항은 다음과 같다.⁶⁹

△ 환경 현황 조사·예측·분석, 저감방안에 제시된 기초 자료의 불명확성과 부실 △ 원전 가동에 따른 온배수 저감방안 모호성 △ 원전 가동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와 정의 불명확 △ 원전 가동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처리방안 미제시 △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와의 경제성 비교 모호성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명시 규정인 사회·경제·환경 분야 저감대책 누락 △ 원전건설 예정지 우회도로 입지조건 부적격 △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기술 용어 부적절 △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기 자료의 부적절성에 따른 부실 △ 평가서 초안의 항목별 비전문가 기술 △ 공업용수 확보를 위한 취수댐 건설에 따른 농업용수 고갈 등 대책 전무 △ 원전 소재지에 따른 울진군 관광 이미지 훼손 및 주민 박탈감 등 사회문화적 저감책 전무 △ 원전 추가건설에 따른 하천 생태계 파괴 및 골재 공급의 불균형 저감방안 전무 △ 일방적 원전 건설로 인한 주민 희생 등에 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보상책 전무

이에 대해 한전 측은 범대위의 평가서 초안 재작성 요청에 대한 회신으로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평가서에 반영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울진군으로 보내왔다. 당시 한전의 이 같은 회신 배경에는 신규원전 건설을 위한 법적 절차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치면 주민 저항과는 별개로 정부의 실시계획 승인을 득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었다.

이러한 맥락을 분석한 범대위는 평가서 초안 재작성에 요구에서 나아가 공청회 자체를 무산시키기에 이른다.

이에 따라 범대위 실무위는 공청회가 예정된 12월 21일 오전 8시경 군수실에서 긴급 실무위원회의를 갖고 공청회 자체를 무산시키기로 의결했다. 당시 공청회는 군청 앞의 울진군 민회관에서 예정됐으며, 공청회 시작 시간 이전에 이미 한전 측이 동원한 울진원자력본부 직원과 가족들로 가득 차 있었다.

공청회가 예정된 시간에 전광순 군수를 비롯하여 김선이 군의장, 임원식 반투위원장 등

68. 『울진저널』, 1995년 12월 24일 ; 울진군 환경 67121-1457,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보완 요청」, 1995년 12월 18일

69. 당시 군민의견수렴대회에서 남효선 실무간사는 울진지역과 울진 해안에 대한 석박사학위 논문과 지역주민의 피해 현황자료 수집 등을 통해 15개 항의 평가서 초안 부실 근거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공동위원장 3인과 남효선 실무 간사는 한전 측 진행자의 마이크를 낚아채고 ‘공청회 불인정’을 선언하며 퇴장했다. 사실상 5·6호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무산시킨 것이다. 당시 전광순 군수는 “12월 14일 원전 관련 범대책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범대위 실무소위원회에서는 전문가의 의견, 자료 수집을 통해 사업자인 한전 측이 작성·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15개 항의 초안 자체에 대한 부실점을 확인했다. 한전 측에 이를 제시하고 평가서 초안의 재작성을 요구했으나 한전 측은 예정된 공청회 1시간 전에 답변을 보내왔으며, 내용 또한 요구한 재작성 보장이 아닌 모호한 답변을 제시해왔다. 7만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책무가 있는 군수로서는 이번 공청회를 인정할 수 없다”라며 공청회 불인정 배경을 밝혔다.⁷⁰

이어 범대위는 울진 원전 5·6호기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 무상 대응을 통해 물적 저항이 아닌 합리적이고 제도적인 저항 방식으로 원전 등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정립시키면서 기존 울진 원전 1·2·3·4호기의 건설·가동과 관련한 당시의 법적 제도적 미비점 등 적폐를 혁파하고 새로운 제도적 장치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는 등 1997년 말까지 활동을 이어갔다.

특히 이 과정에서 1996년 1월경 울진군이 범대위가 ‘불인정 선언’을 하면서 무산시킨 울진 5·6호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조건부 동의’한 사실이 불거지면서 범대위는 심각한 내홍에 휩싸이기도 했다.⁷¹ 이 사건 이후로 전광순 울진군수는 실과부서에 ‘원전 관련 모든 공문은 범대위 실무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처리·시행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당시 대책위 실무위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문제는 △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개정 △ 원전 온배수 피해보상 △ 지역고용력 창출 방안 △ 원전 안정성 확보 방안 △ 지역민과 원전 직원 간 주민 통합 방안 등이다.

이러한 대책위의 활동과 노력은 울진지역에 새로운 원전 관련 대응방법론을 정착시켰다. 종전의 대규모 시위 중심의 대응이 아닌 합법적·합리적 대응 방식을 정착시킨 것이다. 이는 지역민들이 원전을 바라보는 시각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음을 뜻한다. 곧 지역민들 사이에는 원전을 혐오 시설이 아닌, 지역경제 공동체의 견인적 담당자이자 상생의 동인으로 수용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범대위의 지속적인 제도적 투쟁은 △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개정 △ 원전온배수 피해보상 법제화 △ 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등 안정성 확보 방안 마련 제도화 △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 지역고용력 창출 제도화 등의 성과를 가져왔다.

당시 범대위는 실무 간사인 남효선의 실무 주도과 전광순 군수와 김광원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현행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이하 발지법] 개정과 원전온배수 피해 보상 투쟁에 주력

70. 『울진저널』, 1995년 12월 18일 ; 『울진저널』, 1995년 12월 25일

71. 『울진저널』, 1996년 2월 5일

하여 기존의 발지법 상 지원요율인 3/1000을 11.2/1000로 상향하고 주민이 직접 원전에 대한 환경감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조항을 1997년에 개정된 발지법에 신설했다. 이 과정에서 김광원 국회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바꿔가며 법 개정과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의 법제화에 주력했다.

특히 특별지원금제도를 신설하여 울진원전[현 한울원전] 3·4호기부터 적용받도록 제도화했다. 당시 특별지원금의 규모는 원전 1호기 건설비의 1.5/1000에 해당하는 약 1,300억 원 규모이다.

다음은 당시 범대위가 정부와 국회에 제시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률안 개정 의견서이다.⁷²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을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 법률’로 명칭 개정 △ 발지법이 명시한 지원 범위 ‘원전주변 5km 이내 지역’을 ‘해당 자치단체의 당해 읍면 전역’으로 개정 △ 현행 지원사업기금 한도인 ‘전기판매액의 8/1000’을 ‘12/1000’로 상향 조정 △ 기금 운용주제 관련 ‘한국전력공사’를 ‘통상산업부[해당 지방자치단체장]’로 개정 △ 지원금 심의위원회 관련 ‘중앙심의위원장 한국전력사장’을 ‘통상산업부차관’으로 개정 △ 지역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발전소장이 추천’을 ‘해당 지자체장이 추천’으로 개정 △ 지원사업계획 수립 관련 ‘한국전력공사 수립’을 ‘통상산업부가 지자체장의 의견 충실히 반영해 수립’으로 개정 △ 육영사업 시행자 관련 ‘한전 사장’을 ‘해당 지자체장’으로 개정 △ 현행 전기요금보조사업 지원 구역을 ‘5km’에서 ‘해당 지자체 전역’으로 개정 △ 주민복지지원사업 관련 ‘2억 원’을 ‘4억 원’으로 확대 개정 △ 특별지원사업 신설 △ 원전감시기구 설치 △ 원전 온배수 저감대책 마련 및 피해 보상 제도화 등

범대위는 원전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조성한 북면 주인리 소재 대수담을 근거로 ‘원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당시 지방세법상의 지역개발세]’ 조항을 신설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강석호 국회의원의 2회에 걸친 개정 발의로 ‘kW당 5원’으로 명시되어 이 가운데 ‘2.5원’은 울진군으로, 나머지 ‘2.5원’은 사업자인 한수원이 집행하는 사업자지원사업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범대위와 울진군민의 지속적인 투쟁은 1997년 10월 발지법 개정으로 이어졌다.⁷³

발지법의 요율 향상과 특별지원금 신설은 울진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 신장에 크게 기여했으며 민간환경감시기구는 법제화된 지 7년만인 2003년에 울진군이 설치조례를 제정

72. 울진원전관련범군민대책위원회, 1996,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률안 개정을 위한 울진군민 의견서』

73. 당시 울진원전범대위의 3년여간에 걸친 노력으로 1997년 10월 개정된 발지법은 2020년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하고 시행에 들어가 오늘날까지 원전 환경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는 원전 환경 지킴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⁷⁴

특히 범대위는 원전 가동에 따른 온배수의 영향으로 울진 연안해역의 해양생태계 파괴 등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이에 따른 지역 어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투쟁을 통해 원전 3·4호기부터 온배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현재까지 울진지역 어업인들은 원전 가동 호기 수와 온배수 배출량 등에 따른 해양생태계 피해 정도를 전문가 그룹에 의한 실질적 조사 결과에 따라 받고 있다.

범대위는 정부와 국회를 움직이기 위해 울진원자력발전소의 불법행위 등을 감시하고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 등의 전국반핵운동본부와 연대하여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투쟁에 주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범대위는 이성우 군의회의장, 임원식 반투위원장 등 2명의 범대위 공동위원장 명의로 1997년 3월경 울진원자력발전소 5·6호기 취수구 불법 공사 관련 한전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법원에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정부와 한전 측의 원전 건설과정의 일탈 행위를 고발했다.⁷⁵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원전특별지원금제도 신설,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근거 마련, 온배수 피해 보상 실시 등이 이뤄졌다. 또 1997년 전력산업구조조정을 배경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의 기금이 사업자의 출연금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전환, 운용되었다. 이와 함께 울진군을 비롯한 전국 4개 원전 지역 지자체로 구성된 ‘행정협의체’의 활동으로 ‘지역개발세’에 원전시설이 포함되면서 획기적인 지방세 증대를 가져왔다.

(2) 원전 관련 범군민대책위원회 활동 전개

다음은 1995년 12월 울진원전관련범대책위원회 구성 이후 1997년 12월 민선 1기 기간의 범대위 활동 상황이다.

□ 1995.12.4. 울진원전 관련 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구성을 위한 주민대표 소집 회의·기구명칭 결정, 군수, 군의장, 반투위원장의 3인 공동위원장 선임, 실무간사 남효선 선임

□ 1995.12.6. 범대위 실무진 모임-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부실성 등 논의

□ 1995.12.7.~13.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 관련 자료 수집[서울대, 부산대, 해양대, 북면, 죽변면 일원]

74. 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활동 상황 등은 이 글의 뒤편에서 자세히 설명된다.

75. 녹색연합 보도자료, 1997년 3월, 「울진 핵발전소 5호기 불법 공사, 범대책위 한전 형사고발」

- 1995.12.17. 원전 5·6호기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관련 범군민 의견수렴대회-지역 259개 사회단체 참여, 범대위 공식 출범, 실무소위원회 구성
- 1995.12.18. 한국전력공사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재작성 요청
- 1995.12.21. 한국전력공사, 울진군 초안 재작성 요구 회신, 범대위-공청회 불인정 선언
- 1996.1.16. 환경부와 과기처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 1996.1.26. 환경부, 협의 요청 회신-울진군의 의견 반영되도록 한전에 통보
- 1996.5.6. 통산부의 원전건설 후보지 실사작업에 따른 범대위 긴급회의-산포직산 예정지 해제 건의문 발송 결정
- 1996.5.14. 산포직산 원전건설예정지 해제 건의문 채택
- 1996.5.21. 재경 향우회 등 부산, 대구, 포항 향우회에 협조 요청
- 1996.5.25. 예정부지 해제 건의문 정부에 발송[통산부, 환경부, 과기처, 경북도]-통산부는 회신을 통해 전력수급을 위해 예정지 해제는 불가피함. 향후 추가건설 시 주민, 지자체,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함.
- 1996.5.27. 범대위 전체회의-원전 예정지 해제 관련 법적 대응 검토
- 1996.6.5. 범대위 실무소위원회 개최-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관련 무효소송 등 법적 대응 검토
- 1996.6.12~13.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관련 법적 대응을 위한 법률 자문[서울세종합동법률사무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원전 가동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훼손 및 어민 피해사례 수집이 선행되어야 함.
- 1996.7.16. 범대위 실무소위 개최-해양피해조사를 위한 용역 조사 실시(배달환 경소 문의)
- 1996.8.9. 울진원전 5·6호기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 무효 및 산포·직산 예정부지 해제를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 전개
- 1996.8.12~8.31. 범군민 서명운동 전개-서명 인원 1만2280명
- 1996.9.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 법률 개정 군민 의견서 제출
- 1996.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군민 청원서 검토의견서 제출
- 1996.9.1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군민 건의서 제출-국회의장, 국회통산위원장, 신한국당위원장, 통산부장관, 법제처장⁷⁶

76. 울진원전관련범대책위96-1, 1996년 5월 16일, 「원자력발전소 건설예정부지(산포, 직산) 해제 건의문 제출」

□ 1996.9.19. 원전후보지 여건변동조사 관련 범대위 실무회의-산포·직산 해제 결의, 전국 예정지 9곳 동시 조사 아니면 불응, 지원금 운용 관리 주체 지자체 이양 등 논의, 홍기두 통산부 원전발전과장 ; 5.6호기 주민 협의 후 추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립, 지원법 개정 노력 의사 밝힘

□ 1996.9.30. 산포·직산 예정지 실사 관련 긴급회의-정부 측 조사 요원 철수 조치, 해당 지역주민 홍보

□ 1996.10.4. 후포지역에서 실사 조사 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 용역팀인 코리아 네트워크팀 철수 조치함

□ 1996.10.24. 발지법 개정 따른 울진군민 청원소 소개 제출[김광원 의원 외 4명]

□ 1996.12.2.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역주민 대상 전화 설문 조사 실시[산포·직산 중심 반경 1.5km 내 주민 대상]

□ 1996.12.6. 원전 5·6호기 불법 선공사 현장 조사-범대위, 군의회원전특위

□ 1996.12.8.~10. 원전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해 전남 영광 일원 방문

□ 1996.12.12. 원전 5·6호기 취수구 불법 공사 관련 진행 여부 확인-이희성 원전본부장, 토건부소장, 확인 내용 범대위서 검토, 군의회 원전특위와 법적 대응 검토

□ 1997.1.13. 범대위 실무소위원회의-실질적 지역개발 및 피해 보상을 위한 청사진 마련, 주민감시기구 법제화 따른 운영방안, 5·6호기 법적 대응 및 산포·직산 예정지 해제 방안, 원전 관련 총괄부서 신설 방안, 특별법 제정 청원 등 논의

□ 1997.3.3. 울진원전5·6호기 취수구 인테이크 선 공사 관련 대검찰청 중수부에 고발장 접수-고발인 ; 이성우 군의장, 임원식 범대위 공동위원장, 피고발인 한전 이종훈 사장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소송 제기

□ 1997.4.2. 범대위 실무소위원회-범대위 전체회의 일정 논의, 산포·직산 예정지 해제 방안 검토, 원전 측의 지역 상가 불매운동 강경 대응

□ 1997.4.25. 범대위 임시 총회 및 경과 보고대회

(3) 산포·직산 예정지 해제 및 신규 원전 건설 반대 운동

1999년 정부가 전국 9개 지역 원전 후보지 해제와 관련하여 울진지역 후보지인 근남면 산포리와 평해읍 직산리 등 2개소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덕천리 부지’ 지정을 시도하면서 또 한 차례의 울진지역은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린다.

1999년 1월 초 울진군이 ‘북면지역 기존 원전부지 확장 등 대안 제시 조건의 산포원전후보지 해제안’을 담은 내용으로 북면주민에게 설명회를 제안했으나, 당시 신규원전 추가건설을 반대해 온 북면발전협의회 원전특별위원회[위원장 남효선]가 이 제의를 거부하면서 북면

지역에서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다.

앞서 북면 지역주민 의결기구인 북면발전협의회는 ‘기존부지 신규원전 추가건설’ 문제가 불거지자 원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무렵 대안 부지로 거론되고 있던 덕천리 주민들로 구성된 ‘덕천생존권대책위원회[덕천생대위, 위원장 장원중]’와 연대하여 추가건설 저지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어 북발협원전특별위원회는 범군민적 반대 운동 전개를 위하여 1999년 1월 3일 북면 원전추가건설반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대대적인 반대 운동에 돌입했다. 당시 비대위는 북면농업협동조합의 김경하 조합장이 맡았으며, 사무국장은 북발협원전특위 위원장인 남효선이 맡았다.

비대위는 1월 5일 덕천생대위와 연대하며 북면 소재지인 부구리 옛 시장 자리에서 대규모 쫓겨대회를 전개했다. 이 자리에서 당시 신정 울진군수가 ‘산포·직산 등 2개소 원전 예정지 해제를 위한 대안 부지 제시’에 대한 설명회를 요구했으나 비대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1998년 12월 관련 법규를 무시한 채 1983년 원전부지로 관리돼오던 ‘산포지구’를 북면 기존 원전 연접지역인 ‘덕천원전부지 대안 제시’라는 탈법적 정책으로 북면 지역은 전 세계에서조차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핵단지화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라고 주장했다.⁷⁷ 또 동 주민단체는 “울진군민의 미래지향적인 복리증진을 위해 모든 조건과 물적 토대를 동원, 매진해야 할 울진군이 앞장서서 비공개적이고 비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대안 부지 제시’를 하는 등 군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태를 자행했다”라고 울진군의 당시 원전 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비대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 산포·직산 원전 예정지 즉각 해제 및 덕천리 대안 부지 제시 즉각 철회 △ 울진군수 사퇴를 촉구했다.⁷⁸

이어 울진군은 울진군의회와 협의를 통해 1999년 1월 14일 ‘산포·직산원전예정지해제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를 구성하고 전면적인 해제 운동에 들어갔다. 당시 범대위 위원장은 신정 군수가 맡았으며, 사무국장은 북발협원전특위위원장인 남효선이 맡고, 실무 위원회로 선출직 공직자인 경북도의회 의원 3인과 김기현 군의장을 비롯한 10명의 군의원, 임원식, 주광진, 오개동 등 전 원전반대투쟁위원회 회장단과 남철원 당시 반투위위원장이 선임됐다.

이날 범대위 공식 발족에 앞서 울진군의회는 ‘산포원전예정지 해제 및 대안[북면지역기

77. 북면비상대책위, 1999년 1월 5일, 「덕천리생대위 성명서」

78. 『매일신문』, 1999년 1월 4일

존부지확장건설] 제시 백지화를 위한 촉구결의안을 채택한다.⁷⁹

이어 울진지역 선출직 공직자인 김광원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신정 군수, 주기돈, 김용수 도의원, 군의원 등 14명은 연석회의를 갖고 정부에 ‘산포원전예정지해제 및 대안제시’에 따른 질문서를 발송했다. 당시 군의회의원은 김기현·황화섭·주광진·임동술·사영호·전운수·임효문·정일순·이성우·방유봉 등이다.

당시 질문서는 △ 정부의 ‘원전후보지 관리방안’에 제시된 여건변동조사의 정당성 근거 △ 산자부가 울진군이 대안 부지를 먼저 제시한 것으로 공식 발표한 배경 △ 산포·직산 예정지는 해당 법규의 시효 만료에 따라 당연히 해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담고 있다.⁸⁰

1월 14일 출범한 범대위는 이튿날인 1월 16일부터 산자부 항의 방문을 시작으로 산포 직산 해제를 위한 운동을 이어갔다. 당시 정부는 ‘1999년 1월 31일까지 대안 부지 제시’를 요구하며 이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산포지역을 예정지구로 재고시하겠다는 견해를 고수하였다.

이에 따라 범대위는 1월 21일 2차 대규모 군민궐기대회를 개최하고 1월 27일 경기도 과천 소재 정부청사 앞 광장에서 항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울진군민체육관 앞 광장에서 열린 2차 궐기대회는 주민 5,500여 명이 참가하여 △ 산포원전예정지 즉각 해제 △ 기존부지 확장건설[북면] 대안 제시 전면 백지화 △ 울진원전1호기 세관누설사고 경위 공개 및 원전 안전성 대책 즉각 수립 △ 원전온배수 저감대책 즉각 수립 및 실사와 피해 보상 실시 △ 현행 발지법 독소조항 즉각 개정 △ 신규원전부지 관련 일련의 정책추진 과정 공개 및 원전정책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요구하였다.⁸¹

범대위는 정부의 ‘대안 부지 제시’ 시한 만료일인 1999년 1월 31일을 하루 앞둔 1월 30일 실무위원 전원과 함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인 김종권 전 국회의원 면담을 위해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을 방문하고 이 자리에서 김종권 비서실장으로부터 ‘산포 해제 및 대안 부지 제시’ 등과 관련 군민 의사 수렴을 위해 주민투표 방식을 제안받고, 정부의 시한 만료일 연기를 요청한 후 울진으로 돌아왔다. 이어 이날 오후 6시 울진군의회에서 열린 범대회 긴급회의에서 위원장인 신정 군수가 돌연 범대위 위원장직 사퇴를 선언하면서 범대위 향후 입장과 산포 예정지 해제 및 덕천대안부지 제시 철회 문제는 다시 혼란으로 빠져들었다.

이어 울진군은 1999년 2월 1일 ‘대안 제시 불가능 및 산포지구 전면 해제 요청’을 담은 공문을 산자부로 발송했으나 산자부는 ‘대안 제시 시 최우선 고려’ 입장을 담은 공문을 울진군으로 보내왔다. 이어 산포예정지 해제 및 대안 부지 제시 문제는 울진군과 산자부 간의 소통만으로 진행되다가 같은 해 3월 29일 북면 지역의 일부 사회단체 대표와 주민들이 ‘산포지구

79. 1999년 1월 14일, 「울진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80. 1999년 1월 14일, 「군의회의 선출직 공직자 연합회의 자료」

81. 1999년 1월 21일, 「범대위 2차 군민궐기대회 결의문」

해제 및 북면 기존부지 확장 수용’을 담은 건의서를 울진군에 제출하게 된다.⁸²

당시 건의서 제출 소식이 알려지자 북면비상대책위와 북면발전협의회 원전특별위원회, 북면청년회 등 사회단체는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당시 건의서는 앞서 울진군이 1998년 12월경 북면 지역의 일부 지역사회단체 등과 협의한 대안 부지 수용 조건으로 제시한 ‘14개 선결 조건’이행 요구 등이 담겼다.

이어 울진군은 같은 달 30일 군의회에 해당 건의문을 부의 안건으로 제출하고 군의회는 이를 의결함으로써 사실상 ‘산포지구 예정지 해제를 위한 북면 지역 대안 부지 제시’안을 수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울진군은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산포지구 예정지 해제를 위한 북면 지역 대안 부지 제시 수용’ 안을 같은 날 산자부에 공식 공문으로 발송했다. 이어 산자부는 1999년 4월 3일 울진군이 제시한 대안 부지 수용과 ‘북면 지역 신규원전 4기 수용 이후 울진지역 원전시설 종식’ 등을 포함 14개 선결 조건 협의 추진을 담은 공문을 울진군으로 발송했다. 이로써 지난 1996년부터 4년간 지역사회를 혼란으로 몰고 간 ‘산포지구 예정지 해제 및 북면 지역 대안 부지 제시’ 문제는 또 다른 갈등을 내재한 채 일단락됐다.

이후 덕천대안부지 수용과 함께 선결 조건으로 울진군이 제시한 ‘14개 선결 조건’은 당시 제시한 14개 항목 중 대부분의 항목이 1997년 발지법 개정 운동을 통해 이미 시행하도록 규정된 사항들로 이뤄지고 정부와 발전사업자의 시행 지연으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2006년 민선 4기 김용수 군수에 의해 ‘14개 선결조항 중 교육, 의료, 북면장기종합개발 등 3개 분야를 제외한 사업 관련 분야를 재정비해 8개 대안사업’으로 전환, 추진되었다. 이어 8개 대안 사업은 2017년 10월 2,880억 원 규모로 지원금액이 협의, 결정되면서 일단락되었다.

4. 3차 핵폐기물처분장 반대 운동

1) 울진원전반대범군민대책위원회 구성과 핵폐기장 설치 반대 운동

2002년 12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중앙일간지와 방송 매체의 보도로 다시 핵폐기물 처분장 문제가 불거진다.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정부는 울진을 비롯하여 영덕·경주·부안·군산 등지를 대상으로 공모에 의한 주민투표 방식으로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를 선정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울진지역은 또다시 핵폐기장 관련 갈등이 불거지면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82. 이 부분은 울진군에서 당시 해당 부서의 실무진이 작성한 비공개 문건인 ‘원전관련 일지’를 참고하였다.

2002년 12월 16일 울진군의회 정일순 의장과 황성섭 원전특위위원장, 김흥탁 원전특위 간사는 산업자원부를 방문하고 핵폐기물처분장 설치 언론 보도 관련 울진지역 핵폐기장 설치 강력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핵폐기장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서 울진지역을 즉각 제외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 이들 군의회는 언론 보도에서처럼 울진지역이 핵폐기장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지역으로 포함되는 것은 정부가 1999년 공식 문서로 약속한 ‘신규원전 4기 수용 이후 원전시설 종식’ 에도 정면 위배된다고 울진지역을 제외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다.⁸³

이어 울진군의회는 12월 28일 울진군수실에서 김용수 군수와 핵폐기장 관련 간담회를 갖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당시 간담회에는 김용수 군수, 정일순 의장, 황성섭 군의회특위위원장, 김흥탁 특위 간사, 주광진, 장덕중, 전완철, 송재원 군의원, 황천호 울진사회정책연구소 소장, 황윤길, 남효선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울진군수와 군의회, 사회단체는 핵폐기장 설치 반대를 의결하고 울진원전 반대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이 자리에서 남효선 등은 범대위의 공동대표로 김용수 군수를 비롯하여 군의장 등 선출직 공직자의 참여를 강력하게 요청했으나, 김용수 군수가 ‘지자체 행정의 장’임을 들어 고사하면서 국회의원, 군수, 군의장은 범대위의 고문으로 참여하기로 하고 범대위 공동대표 등은 2003년 울진 JC주관의 신년교례회 자리에서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12월 31일 [가칭] 범대위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 정부가 1994년과 1999년 4월 울진군민에게 제시한 ‘울진지역 핵폐기장 건설 불가’ 약속 이행 △ 정부의 핵폐기물처분장 유치 음모 즉각 철회 및 공개 △ 덕천신규원전부지 지정 즉각 철회 △ 가동 중 원전에 대한 안정성 정보 공개 등을 촉구하였다.

[가칭] 범대위는 2003년 1월 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울진원전반대범군민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결성식을 갖고 황성섭 울진군의회 원전특위위원장과 황천호 원전반핵연대 공동대표, 김대영 울진군청년연합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면서 공식 출범하였다. 고문으로는 김광원 국회의원, 김용수 군수, 정일순 군의장이 선임되고 사무국장에는 황윤길이 선임됐다. 또 부위원장에는 장명중 울진JC회장과 이정무 후포JC회장을 비롯 홍기영·남구봉·황윤현·전인수·김운섭·주광동·최웅렬·김용식·신길용·이용관·황세진 등 각 읍면 청년회장이 선임됐다. 자문위원으로는 전 반투위원장인 주광진·임원식·오개동·남철원이 선임됐다.

범대위는 1월 14일 2차 성명서 발표와 동시에 2만부를 제작, 지역 각 가정에 배부하고 10개 읍면에 ‘핵폐기장 설치 절대 불가’를 담은 현수막을 게첨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1월 17일 울진시장을 비롯한 10개 읍면 거리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83. 2002년 12월, 「울진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1월 20일 산업자원부와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민주당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실을 방문해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울진설치 반대 결의문’을 전달하였다.

당시 범대위는 한국반핵운동연대와 연계하면서 황천호 공동위원장과 황운길 사무국장, 조상현 정책부장이 전국 반핵회의에 참석하는 등 투쟁 역량과 외연을 강화하였다.

1월 18일 범대위는 대통령 인수위 정책제안센터를 방문해 이종오 본부장과 면담을 갖고 ‘핵폐기물 처분장 울진설치 불가’를 담은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자리에는 정일순 군의장, 장덕중 의원, 황천호·남효선·황운길·조상현이 참석하였다.

이어 1월 20일 범대위 임원단 회의를 갖고 핵폐기물처분장 설치 불가 대군민 홍보 강화 등의 향후 대응책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는 3인 공동위원장과 울진반핵연대의 장시원·이규봉·전명윤·김태규·황운길 등 22명이 참석하였다.

범대위는 핵폐기장 반대 운동에 소요되는 경비 마련을 위해 군민 모금을 전개하기로 하고 범대위 명의의 모금 계좌를 개설하였다. 당시 지역주민 5,000여 명이 모금 운동에 참여하였다.

이어 2003년 1월 27일 정일순 의장과 이성우 군의원, 남효선, 조상현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 대구·경북 지역 방문 행사에 참석해 대통령 인수위 권기홍 사회분과위원장에게 ‘울진핵폐기장 불가’의 당위성을 담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범대위는 이후 핵폐기물처분장 설치 반대를 위한 상경 투쟁, 지역 거리 캠페인을 이어갔다.

같은 해 2월 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범대위 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군청 마당에 설치한 농성장의 철야농성 지속 운영, 군민 및 출향인 서명운동 등을 강력하게 전개하기로 의결하였다.

같은 해 2월 6일 황천호 공동위원장과 이규봉, 전명윤 등 울진반핵연대 집행부는 서울 종로구 동숭동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핵폐기장백지화, 핵발전 추방 반핵 국민 행동’ 출범식에 참석하고 2월 7일을 기해 범대위를 ‘울진군핵폐기장반대투쟁위원회[이하 핵반투위]’⁸⁴로 조직 명칭을 변경하였다. 또 김흥탁 군의원을 대외협력위원장으로 선임하여 군의회와 지역 사회 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했다.

같은 달 8일 범대위는 3차 성명을 발표하고 △ 울진핵폐기장 후보지 선정 즉각 철회 △ 핵발전소 추가건설 즉각 중단 △ 핵폐기장 청와대 설치 △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 핵폐기장 건설 포기 촉구 등을 요구했다.

범대위는 이어 2월 12일 울진군민회관에서 주민 3,000여 명이 참가하는 ‘울진핵폐기장 건설 저지 1차 범군민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반대 역량을 강화했다. 이날 궐기대회

84. 아래 글에서는 울진군핵폐기장반대투쟁위원회를 앞서 1999년~2001년까지 울진지역 반핵운동을 주도한 울진군반핵투쟁위원회(이하 반투위)와 구별하기 위하여 약칭으로 ‘핵반투위’라고 사용한다.

는 이규봉 핵반투위 미디어팀장의 사회로 김용수 군수, 김광원 국회의원의 인사말, 식발식, 최성국 반핵국민행동 집행위원의 연대사, 결의문 채택, 신국환 산업부장관, 최양우 한국수력 원자력사장, 홍장희 울진원자력본부 본부장 등 3인 모형 화형식, 거리 시위 순으로 진행됐다.

당시 김용수 군수는 “울진군에는 혐오 시설인 원전 4호기가 이미 가동하고 있고 2호기는 건설하고 있다며 정부가 1994년, 1999년, 2000년 등 3회에 걸쳐 제시한 ‘울진핵시설종식’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김광원 국회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직인수위가 이 정부에서 시행한 후보지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는 인수하면서 울진에 핵폐기장을 짓지 않겠다는 약속은 인수하지 않고 있다며 울진군민에게 공식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또 핵반투위 황성섭, 황천호, 김대영 공동위원장은 식발로서 항거했다. 화형식이 끝나자 핵반투위는 선두에 울진지역 전교조 교사들로 구성된 풍물패를 앞세우고 김광원 국회의원, 김용수 울진군수, 군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를 중심으로 “핵폐기물처분장 유치 음모를 즉각 파기하라”라고 적은 대형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상여를 맨 뒤 거리 시위에 돌입했다. 7번 국도로 진입하는 울진읍내 시가지는 “핵폐기장 반대” 만장과 피켓으로 뒤덮였다. 군민들은 울진세무서 앞을 지나 7번국도 변에 있는 한전 울진지점을 향해 나아갔다. 그러나 한전지점 진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진입을 시도하는 군민들과 경찰이 대치하면서 한때 실랑이가 벌어지고 분위기가 일순 험악하게 진행됐으나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군민들은 한전 앞 마당에서 연좌시위에 들어가는 한편 집행부가 마련한 빵과 우유로 점심 끼니를 때웠다. 이날 오후 3시경 군민들은 울진읍 남부진입로인 7번 국도에서 연좌 농성에 돌입했으며 황천호 공동대표의 사회로 시위 현장 정리를 위한 평가회를 가졌다.⁸⁵

같은 해 2월 14일 경북도의회의장 최원병이 제17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울진·영덕 핵폐기물처리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동해안 지역 핵폐기물처리장 설치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⁸⁶

이 무렵 울진원자력발전소 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임시저장고에서 빗물 누수 사고가 발생하여 군의회원전특위가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어 울진핵반투위는 3인 공동위원장과 울진반핵연대 이규봉·전명윤·전종율 등의 주도로 같은 해 2월 26일 포항시에서 열린 ‘핵폐기장백지화를 위한 경북도민 대책위원회 발족대회’에 참가하고 핵폐기장백지화 핵발전소추방 반핵국민행동에 참여하는 등 외연을 넓혀가며 핵폐기장 설치 반대 투쟁을 이어갔다. 또 울진핵반투위는 울진군청 앞 철야 농성장을 통해 철야 시위를 전개하고 읍면별 농성장에서 철야농성을 벌이는 등 지속적인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85. 『시민의 신문』, 2003년 2월 12일

86. 『시민의 신문』, 2003년 2월 14일

또 핵반투위는 울진군과 연계하여 울진핵폐기장 후보지 철회를 위한 법률적 대응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 무렵인 2월 26일 울진지역의 일부 인사들에 의해 울진원자력본부 전시관 강당에서 ‘울진사랑모임회’가 결성되었다. 이들 모임의 성격은 원전 추가건설 등을 지지하는 이른바 친 원자력 성향을 지녔다. 당시 이 모임에 참가한 단체와 주민들은 회장단으로 선임된 김성구 [후포], 도치각[울진]과 황재영·장진창·최천환·노일순 등 71명이다. 여기에 한전의 지원으로 구성된 원자력문화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같은 해 3월 19일 다시 울진지역에서 핵폐기물 처분장 반대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었다.

울진핵반투위는 북면 부구리 북면사무소앞 광장에서 ‘핵폐기장백지화와 에너지 정책 전환 촉구’를 위한 2차 군민궐기대회’를 열고 울진 핵폐기물처분장 후보지 즉각 철회와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 파기와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날 궐기대회는 김광원 국회의원, 김용수 군수, 정일영·방유봉·김정자 경북도의원, 정일순 군의장 외 군의원 9명, 황성섭·황천호·김대영 등 핵반투위 공동위원장, 김성근 한국반핵연대공동대표, 황성원 청년환경센터 대표, 나호근 녹색연합 위원, 대구경북핵폐기장반대대책위, 영덕·영광·고창 지역핵반대투쟁위 집행위원장과 주민 4,000여 명이 참가하였다.⁸⁷

울진핵반투위는 이날 오후 2시 울진원전이 위치한 북면에서 2차 군민궐기대회를 하고 “울진핵폐기장 절대 불가” 입장을 재천명한 뒤 원자력발전소 정문 앞에서 “핵폐기장 결사반대”를 외치며 7번 국도를 점거하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가 진행되는 동안 오후 3시부터 4시간 동안 7번 국도가 마비됐다. 군민들은 각 지역에서 차량으로 시위장소로 이동한 뒤 원전 정문 앞에서 반대 현수막을 앞세우고 7호선 국도 1차선을 점거하면서 면사무소 광장에 마련된 1차 시위장소로 들어섰다.

2차 궐기대회 양상은 지난달 12일 1차 시위 때와는 분위기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됐다. 2차 궐기대회에는 군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시위에 참여한 군민들의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핵폐기장에 대한 위기감이 울진군민들 사이에 점차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핵반투위는 “이 땅 어디에도 핵폐기장은 안 된다”라는 성명 발표와 함께 군민이 생업을 포기한 채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을 군민들에게 호소하고 “울진 땅과 울진인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공동투쟁에 나서자”라고 핵폐기장반대 의지를 천명했다.

김용수 울진군수는 “정부가 1991년, 1994년, 2000년 세 차례에 걸쳐 울진군민과 핵폐기장은 절대 건설치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또다시 울진을 핵폐기장 후보지로 지정 발표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울진군민의 힘으로 정부의 부도덕한 행위를 막아내자”라고 강조했다.

87. 『시민의 신문』, 2003년 3월 19일

정일순 군의장은 “정부가 세 차례의 약속을 올진군민과 하고 정부 스스로 약속을 버리는 상황에서 이제 올진의 미래는 올진군민들 손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정부가 올진을 버렸다. 이제 우리 손으로 올진을 지키자”라고 군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김광원 국회의원은 “1998년도 김대중 대통령은 올진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국 어디에서도 원하지 않는 신규원전을 올진군민이 받아주어서 꼭 이 신세를 갚겠다고 말했는데 퇴임 20여 일 전에 올진을 핵폐기물처분장 후보지로 결정했다”라고 정부의 부도덕성을 비난하고 “올진군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도 믿을 수 없으며 올진군민 스스로가 지키고 싸워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김의원은 “덕천 신규원전 부지 지정 무효를 포함한 산자부장관, 한수원관계자에 대한 무효소송 등 법률적 대응을 즉각 시도하겠다”라고 말했다. 군민들은 이어 “핵폐기장반대” 현수막과 차량을 선두로 올진원자력본부를 향해 거리 시위에 들어갔다. 올진원전이 위치한 7호선 국도변에 이르는 700여m 구간에는 시위 인파로 뒤덮였으며 강릉과 부산을 잇는 7번 국도는 삼시간에 마비됐다. 시위대 전면에는 김광원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김용수 올진군수, 도의원, 군의원, 핵반투위 집행부가 시위를 이끌었다. 올진원전 정문 앞으로 나아간 군민들은 최양우 한수원사와 홍장희 올진원전본부장 면담을 요청하면서 연좌 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시위에는 경찰 10여 개 중대 병력이 동원됐다. 면담 요청이 불발되자 군민들은 시위 차량을 앞세우고 원전 정문으로의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군민들과 경찰 간에 실랑이가 발생했으나 별다른 마찰은 발생하지 않았다. 시위과정에서 경찰은 군민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과잉진압을 자제하는 편이었다.⁸⁸

같은 해 3월 24일 핵반투위는 올진청소년수련관 2층에서 핵폐기장반대 상경 투쟁을 위한 대책 회의를 가졌다.

같은 해 3월 27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핵폐기장백지화, 핵발전 추방 반핵국민행동이 주최한 ‘핵폐기장 후보지 백지화, 핵발전 추방 국민대회’가 열렸다. 이날 전국 규모의 집회에는 올진핵반투위와 올진군민 500여 명이 관광버스 14대를 이용해 시위에 참여하였다. 이날 집회에서 방유봉 도의원과 황유성 올진핵반투위 조직부장이 식발로써 정부행태에 저항하였다.

이어 올진핵반투위 황천호 공동위원장과 황윤길 집행위원장, 김태규 홍보부장 등은 3월 28일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 규탄·백지화 요구 기자회견 및 무기한 단식농성’에 참여하였다.

이 무렵 올진사랑모임 등 올진지역 핵폐기장 유치 인사들은 같은 해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대전시 환경기술원과 남해화학 일원에 견학을 다녀왔다. 올진원자력본부의 인솔로

88. 『시민의 신문』, 2003년 3월 19일

진행된 견학에는 임상호·도치각·황재영 등 36명이 참석했다.

이어 이들 핵폐기장 유치 인사들은 같은 해 4월 10일 울진읍 연지리 소재 장수가든에서 ‘핵폐기장유치위원회 창립총회’를 열고 울진지역 핵폐기장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창립대회에는 10개 읍면에서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공동위원장으로 임상호, 이천숙, 김형삼의 3인을 선임하고 고문에 한학수, 최효덕을 선임한 후 황대동의 사회로 결의문 채택 등 20여 분만에 마무리되었다. 이날 창립대회가 열린 장수가든 앞에서는 울진핵반투위 정일순 고문과 황천호 공동위원장, 읍면별 청년회장 150여 명이 현수막과 구호를 외치며 핵폐기장 유치반대 집회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두 단체 간의 실랑이가 발생했으나 큰 불상사로 진전되지는 않았다.

같은 해 4월 17일 핵반투위 집행부는 핵폐기장 후보지 철회를 위한 법률 대응을 위해 상경하여 법무법인 김진세 변호사와 협의를 가졌다. 핵반투위는 법무법인 율촌의 윤윤수 변호사를 법률대행인으로 덕천리 신규원전 지정 건 관련 무효소송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4월 19일 울진 핵반투위 황성섭·황윤길 공동위원장과 영광, 영덕, 고창 등 4개 지역 반핵단체 대표, 반핵국민행동 김영락 공동대표, 서주원, 김대성 집행위원장, 최성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등이 윤진식 산자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진식 산자부 장관은 “울진에는 핵폐기장을 설치하지 않을 것임”을 공식으로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울진지역에 알려지자 울진핵반투위는 ‘울진군민들의 승리, 핵폐기장 울진제외를 환영한다’라는 제목의 긴급성명서를 발표하고 “4월 19일 윤진식 산자부 장관의 울진핵폐기장 후보지 제외 발표는 울진군민들의 단결된 투쟁이 일구어낸 7만 군민의 승리”라고 환영했다. 또 “참여정부는 윤진식 산자부 장관의 구두 선언이 아니라 핵폐기장 울진제외를 공식으로 선언하고 공개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반핵투위는 이어 성명서에서 “울진군민의 의사와는 정반대로 지정 고시된 7·8·9·10호기 북면 덕천 신규원전 부지 지정 고시 철회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밝히고 “핵폐기물처분장유치위원회는 즉각 유치위를 해체하고 울진군민이 바라는 울진인으로 돌아와 줄 것”을 촉구했다.⁸⁹

당시 울진군민들은 윤진식 장관의 면담 시 구두 발언에 대한 썰기를 박기 위해 산자부 홈페이지에 울진군민 3,500여 명이 감사의 댓글을 달고, 10개 읍면에 ‘산자부 장관 울진핵폐기장 설치 제외’와 ‘울진군민 감사합니다’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내붙였다. 이 무렵 서울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이어오던 황천호 공동위원장이 단식농성을 마치고 울진으로 귀가하였다.

이 무렵 3월 19일 열린 북면 집회 피의자 9명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과정에서 군수와 황

89. 『시민의 신문』, 2003년 4월 19일

성섭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되었다.

또 이 무렵인 4월 26일 동궁 뷔페식당에서 울진을사랑하는모임이 정기총회를 열고 임태수를 회장으로, 황재영을 부회장으로 선임하였다. 이 자리에서 집행부는 울진군민이 핵폐기장 설치를 반대해도 정부 계획대로 울진에 핵폐기장이 들어설 것이라며 핵폐기장 유치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해 4월 26일 오전 2시 30분경 울진핵반투위 주광돈과 전인수 등 2명의 청년회장이 당시 한수원 사장인 최양우가 투숙하고 있는 덕구호텔을 방문하고 최양우 사장에게 ‘울진에 핵폐기장을 건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정부의 공문을 이행토록 건의할 것’을 요구하는 각서 강요 사건이 발생했다.⁹⁰ 이어 4월 27일 이 사건으로 주광돈 근남면청년회장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되고 전인수 북면청년회장은 이튿날인 4월 28일 오후 1시경 울진경찰서에 의해 긴급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⁹¹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자 울진핵반투위는 ‘최양우 면담 사건의 진실과 의미’의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 울진군민의 뜻을 대변한 전인수 부위원장과 주광돈 조직 간사의 의로운 투쟁을 계승할 것이며, 정당한 투쟁이었기에 무죄임을 선언한다. 만약 구속된다면 끝까지 석방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 울진군을 죽음의 땅으로 몰아가는 한수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울진군민의 공적인 최양우를 퇴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 핵폐기장 후보지에서 울진을 완전히 제외하는 날까지 더 힘차게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강도 높은 투쟁을 통해서 울진군민의 의지와 단결된 힘을 보여 주겠다. △ 앞서 투쟁한 동지들의 희생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을 것이며 핵반투위가 모든 투쟁에서 헌신적으로 앞장설 것”이라고 천명했다.⁹²

이후 같은 해 12월 26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주광돈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전인수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⁹³ 이들 2명은 항소했으며 전인수는 구속된 지 85일만인 2004년 7월 18일 금보석 300만 원, 주광돈은 구속된 지 134일만인 9월 8일 500만 원의 금보석으로 석방됐다.

울진핵반투위는 2004년 5월 1일 청와대 앞에서 연좌 단식농성을 전개하며 울진핵폐기장 설치 반대 투쟁을 이어가는 한편 같은 날 울진군청소년수련관에서 핵발전소 바로 알기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김종달 경북대 교수 초청 강연회에는 울진군 이장, 새마을지도자, 사회단체 5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어 같은 해 5월 9일 울진핵반투위는 울진군의회 3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전인수, 주광돈 청년회장 구속, 유치위원회 활동 저지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는 핵반투위

90. 울진군, 「2003년 원전관련 일지」

91. 『시민의 신문』, 2003년 4월 28일

92. 울진핵폐기장반대투쟁위원회, 「2003년 4월 30일 성명서」

93. 『시민의 신문』, 2003년 12월 26일

공동위원장, 전완철, 황인호 군의원, 이규봉, 장시원, 읍면 청년회장 등 12명이 참석하였다.

이후 울진핵반투위는 군청 앞 농성장 철야농성과 울진원전본부 앞 출근 저지 투쟁 등을 병행하며 반대 운동을 이어갔다. 이들 핵반투위는 5월 19일 울진원전정문 앞 출근 저지 투쟁을 통해 원전본부장과 면담을 갖고 △ 핵폐기장유치지원 즉각 중단 △ 한수원의 금품 살포 및 유치 홍보물 배포 즉각 중단 △ 최양우 한수원 사장 즉각 퇴진 △ 구속된 전인수·주광돈 청년회장 석방 운동 한수원 앞장설 것 △ 핵폐기장 후보지 울진제외 법적·행정적 즉각 이행 △ 원전 7·8·9·10호기 백지화 등을 요구하였다.

5월 19일과 20일에 2003년 3월 19일 2차 군민궐기대회 관련 김태광·황천호·장시원·전종률·황종석·주광돈·장재묵 등 7명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어 5월 27일 군청대회의실에서 울진핵반투위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울진핵반투위의 조기 결속과 투쟁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군수, 군의장,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를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안건이 제기되었으며, 또 현행 핵반투위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일부 조직 개편하자는 의견이 대립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두 가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론을 얻지 못하고 다음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같은 달 28일 울진핵반투위 이규봉 미디어팀장과 전종률 등 10여 명이 울진원전본부를 향의 방문하고 주광돈, 전인수의 구속과 최양우 한수원 사장의 부상 관련 진상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울진핵반투위가 군청 앞 농성장에서 철야농성을 이어가며 핵폐기물처분장 울진 설치 반대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한편 유치 측 단체들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유치위원회에서 발간한 홍보 책자를 근남면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배부하는 등 유치 활동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울진군민 간의 민-민 갈등이 증폭되기도 했다. 핵폐기장 문제를 놓고 “핵단지화에 따른 지역발전퇴행론”과 “지역개발론”이 주민들 간에 갈등의 대립각으로 부각되면서 결국에는 주민들 간 대립양상으로 고착화되는 양상으로 전개된 셈이다.

지역주민 간 민-민 갈등이 첨예화되자 김용수 군수는 핵반투위 황성섭, 황천호 공동위원장과 황윤길 집행위원장, 임상호 유치위원회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난립하는 현수막의 자진 철거와 지정된 게시판을 이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이들 양측 집행부는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무렵 울진군은 (주) 대우엔지니어링이 울진군에 신고한 ‘산포리 핵폐기장부지 지질조사를 위한 굴착행위 신고서’를 반려했다.⁹⁴ 이어 같은 해 6월 11일 정동락 사장이 한수원 2대 사장으로 취임했다.

같은 해 6월 20일 유치위원회가 근남면 복지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94. 『시민의 신문』, 2003년 6월 6일

근남면핵폐기장반대투쟁위원회와 몸싸움 등이 발생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마무리되었다. 이어 6월 27일 울진을 연지리 소재 장수 뷔페식당에서 울진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유치위원회가 자체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임상호 회장과 황대운 전 의원, 이규목 전 교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같은 해 6월 30일 울진핵반투위가 2003년 2월 5일부터 군청 앞마당에 설치하고 철야농성을 이어 온 농성장을 자진 철거하였으며, 유치위원회가 유치 설명회를 위해 요구한 울진청소년수련관 이용을 김용수 군수는 장소제공 불가 입장을 밝혔다.

같은 해 7월 5일 연지리 소재 장수가든에식장에서 산자부가 주관하는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설명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산자부와 한수원 본사, 울진원자력본부 관계자들과 울진지역 유치위원회 집행부, 주민들이 다수 참석하였다. 울진핵반투위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 양측 간의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같은 해 7월 8일 울진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유치위원회 대표위원장 임상호가 울진군과 울진군의회에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및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연계유치신청 의결 및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신청하였다. 이어 울진군은 7월 11일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유치위원회 측이 신청한 건에 대해 부결하였다.

이 무렵 울진원자력발전소와 하청업체,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울진주민들로 구성된 원우회[회장 정광수]가 울진군수와 면담을 갖고 원전 7·8호기 추가 건설과 원전수거물관리센터 및 양성자가속기를 군수가 유치 신청할 것을 요구하였다.⁹⁵ 이 자리에서 김용수 군수는 “정부는 그동안 3번이나 공문을 통해 원전 종식을 보장”하였고 산자부 장관도 “여러 차례 울진을 제외할 것임을 밝혔다. 양성자가속기 등이 핵폐기장 유치 관련하여 언제, 어떻게 하는가 등의 법적 보장도 없을뿐더러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는 현재로서 찾아보기 어렵다. 핵단지화 되는 엄청난 위험 속에 과연 우리 군이 더 잘 사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심해야 한다”며 사실상 요구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유치위원회는 7월 14일 군청 앞에서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한 ‘유치신청촉구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울진군과 울진군의회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과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유치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채택하였다.

2003년 7월 14일 김종규 전라북도 부안군수와 김형인 부안군의회의장이 산자부를 방문하여 ‘원전수거물 관리시설과 양성자가속기 기반공학사업 유치신청서’를 최초 신청하면서 당시 울진지역의 핵폐기물처분장 반대 운동도 마무리되었다.

당시 울진핵반투위는 7월 17일 △ 울진군민 단결된 힘으로 핵폐기장 저지 △ 핵폐기장 저지는 울진군민 모두의 승리 △ 울진군민을 기만하고 분열시킨 산자부와 한수원 규탄 △ 군

95. 울진군, 「원전관련 일지」

민 화합으로 새울진 건설 매진 등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주민들에게 배부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7월 24일 전북 부안군 위도를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로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으나, 이어 거세게 터져 나온 전북도민 차원의 반대 운동 등 이른바 ‘부안사태’가 불거지면서 핵폐기물처분장 위도 지정은 무산되었다. 이후 정부는 방사성폐기물을 원전수거물이라는 용어에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로 분리하고 2005년 3월, 유치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후 한국수력원자력의 본사 이전, 양성자가속기 사업의 유치 연계 등을 마련하고 유치에 들어갔다. 당시 전국에서 유치를 신청한 지역은 군산·경주·울진·영덕·포항·영광·고창의 7개 지역이었다. 울진지역은 지자체 차원에서 신청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유치 단체가 신청한 것이다.

지역사회 일각에서 핵폐기물처분장 유치를 신청하자 다시 울진군은 혼란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당시의 혼란상은 이 무렵 보도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⁹⁶

2005년 8월 29일 울진군의회장 주광진은 오전 10시 울진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울진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신청 동의안’을 처리키 위한 140회 임시회를 긴급 소집하였다. 울진군의회는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임시회를 열고 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신청 동의(안)’를 거수로 표결에 들어갔다. 거수투표 결과 반대 5표, 찬성 5표가 나오면서 유치신청 동의안은 부결되었다.

울진군의회가 공식적으로 ‘유치신청동의안 부결을 선포함’에 따라 지난 1989년, 1990년, 1991년, 1994년, 1999년, 2001년과 2003년 등 ‘방폐장 반대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는 등 17년간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자리를 잡아 온 ‘울진 방폐장 문제’는 일단락됐다.

당시 표결은 울진군의회 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팽팽한 긴장감 속에 ‘찬반을 묻는 거수’ 당시 찬반을 묻는 투표에서 유치신청을 찬성한 군의원은 정일순·황재곤·사영호·장덕중·안왕렬 등 5명이며, 유치 반대를 표명한 군의원은 송재원·전완철·김흥탁·주광진·황성섭 등 5명이다.⁹⁷

표결에 앞서 주광진 군의회 의장은 개회선언에 이어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5일까지 열린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의 성공개최를 위해 매진한 울진군민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한 뒤 “산자부가 지난 199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울진에 신규원전 건설이 가능하

96. 『시민의 신문』, 2005년 8월 29일

97. 울진군의회 제4대 제140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 2005. 8. 29

게 될 경우, 울진지역에는 방폐장을 비롯하여 원전 시설물을 더는 짓지 않겠다'라는 약속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이행치 않고 있다"라며 "정부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8월 23일 군 집행부가 군의회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신청 동의안'을 제출해 오며 따라 오늘 긴급 임시회를 소집하게 됐다"라고 임시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이종인 울진군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정부가 3차에 걸쳐 울진지역에는 방폐장을 포함한 더 이상의 원전시설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핵종식 약속을 했음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라며 "최근 지역경제 지원론을 담은 방폐물처분시설과 관련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상황과 여건 변화로 다수의 주민이 방폐물처분시설 유치를 희망하고 있고 또 정부 공고에 의거 8월 31일까지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유치신청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군의회에 '중저준위방폐물처분시설 유치신청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다"라고 동의안 제출에 따른 배경을 설명했다.

당시 임시회 본회의장에는 2003년부터 '울진핵폐기장 설치 불가' 입장을 견지하며 울진핵반투위를 통해 원전 관련 군정 방향을 잡아 온 김용수 울진군수와 군 실과장 전원과 찬·반 양측 주민대표, 언론사 관계자 등이 상기된 표정으로 참석하였다.

임시회가 열리는 울진군의회와 울진군청 앞마당에는 유치반대 운동을 수년째 전개해 온 핵반투위와 읍면 청년회 등 유치반대 측 주민과 유치위원회 측 주민 등 200여 명이 각각의 입장을 담은 현수막을 내걸고 긴장감 속에 군의회의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군의회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 경찰에 경호를 요청, 2개 중대 100여 명의 경찰이 울진군의회와 울진군청 마당에 투입되었다.

이날 10시 30분경 군의회의 표결 결과가 '부결'로 알려지자 유치반대를 주장해 온 울진핵반투위와 청년회, 울진농업경영인회, 주민들은 '만세삼창'을 외치며 군의회의 결과를 크게 환영했다. 반면에 울진발전포럼 소속 회원 등 유치위원회 측 주민들은 군의회의 결과에 항의하며 의회 진입을 시도하는 등 격앙된 분위기가 연출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양측 주민들은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는 등 성숙된 시민 의식을 보였다.

이보다 앞서 울진군은 같은 해 8월 11일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7조 규정에 따라 6월 16일 발표된 공고에 의거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8월 31일까지 산자부 장관에게 시설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 △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주요결정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 13조 2의 1항 규정에 따라 방폐장처분시설과 관련한 주민 찬·반 의견을 민주적인 절차인 주

민투표를 통해 결정키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 신청 동의(안)’를 군의회에 제출했으며 군의회는 ‘부지 적합성 최종 판정 미비’ 등 유치동의안의 내용상 결격을 이유로 두 차례 반려했었다.

이어 정부는 2005년 11월에 지자체 차원에서 유치신청을 한 경상북도 경주시와 영덕군, 전라북도 군산시 등 3곳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해 같은 해 11월 89.5%로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인 경주시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로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2003년 이후 울진핵폐기장 설치 반대 운동 과정에서 사법 처리를 받은 주민들은 주광돈·전인수·황천호·장시원·전종률·김상록[김태광]·남계문·장재묵·황종석이다.⁹⁸

2003년 이후 울진핵폐기장반대투쟁위원회를 사실상 주도한 울진반핵연대는 이후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울진사람들[약칭 핵안사]’로 조직을 강화해 가동 중인 한울원자력발전소의 원전 안전성과 신규 원전건설 반대 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2) 신규원전[신한울원전] 부지와 14개 선결 조건 이행 범군민대책위원회 활동

1999년 3월 30일 울진군은 ‘북면 부구리 기존 부지 내 4기 수용과 주민 요구 선결 조건 14개항’을 담은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산포 지역] 지정·고시 해제를 위한 대안을 산업자원부에 제출하였다. 이어 산업자원부는 1999년 4월 3일 ‘산포리 예정 구역 해제와 북면 부구리 기존부지 확장 대안수용 결정’을 울진군에 공문으로 통보하였다.

14개 선결 조건은 △ 지역 내 원전시설 종식 보장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원전안전관리 공동참여 보장 △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울진지소 설치 △ 북면 지역 특수 대학 설립·운영[한전 설립 운영] △ 기존 피해보상책 강구[연근해 어장 피해 보상 및 실농·실어비 보상] △ 원전 부지 추가지정에 따른 피해지역 선 보상 이주 및 지원 △ 북면 지역개발 계획수립·시행 △ 연안어장 목장화 사업 추진 △ 울진원전 5·6호기 조기착공 △ 울진 종합병원 건설·운용 △ 울진원전 명칭 변경[울진원전 ⇒ 부구원전] △ 골프장 설치를 위한 민자유치 지원 등이다.

당시 산자부는 이 공문을 통해 “울진군이 요구한 ‘14개 선결 조건’의 충실한 이행”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한수원은 2007년 말까지도 ‘14개 선결 조건’ 이행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울진군과 울진군의회는 ‘14개 선결 조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8회에 걸쳐 제출하였다. 정부는 2002년 5월 4일 ‘14개 선결 조건’ 이행 없이 북면 덕천리 일원을 신한울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예정 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이에 대해 울진군의회와 북면발전협의회, 울진참여연대 등 지역사회는 산자부를 항의방문하는 등 신규원전 지정고시

98. 『시민의 신문』, 2005년 9월 1일

철회를 요구하였다.⁹⁹

이어 울진군은 2004년 7월 15일 ‘기존부지 확장수용대안 선결사항 추진현황 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산자부에 요청하였다.

이 같은 ‘14개 선결 조건 이행’ 요구와 항의 방문 등에도 정부와 한수원이 이에 응하지 않자 울진군의회의는 2007년 11월 19일 정기의회 군정질의를 통해 장덕중 군의원의 발의로 ‘14개 선결조항 및 원전 안전성 등 현안 해결을 위한 TF[특별대책] 팀’ 구성을 제안하고 당시 김용수 군수가 이를 수용하면서 ‘14개 선결조건 이행 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구성되었다.¹⁰⁰

이어 2008년 1월 14일 울진군과 군의회, 지역사회단체 연석회의를 통해 범대위가 구성되었다. 당시 범대위 위원장은 남효선이 선임되었으며 군의회원전특별위원회 위원, 울진군이 장협의회장, 북면발전협의회장, 죽변발전협의회장, 울진군청년연합회장, 울진군부녀회장 등 지역사회단체 대표 13명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범대위는 2008년 1월 18일 개최된 신한울원전1·2호기 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를 계기로 기존의 ‘14개 선결조항’의 불합리한 항목과 실효성이 없는 ‘사업’ 분야를 ‘8개 대안’으로 재정리하고 여기에 기존의 의료·교육·북면장기종합개발계획 시행 등 3개 항목을 존치시켜 ‘11개 항목’으로 재정리하여 이를 수용할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하였다.

당시 범대위가 정부에 제시한 ‘8개대안사업’은 △ 자율형 사립고 한수원 건립 운영 △ 울진군 의료원 한수원 책임 경영 △ 북면 장기개발계획 시행 △ 울진종합체육관 건립 △ 관동팔경 대교가설[2개소] △ 한수원 휴양소및 연수원 건립 △ 신울진원전 건설 및 운영 △ 지역고용창출 제도화 △ 울진지방상수도 확장건설 등이다.¹⁰¹

범대위는 재정리 요구안 관철을 위해 당시 2008년 1월 18일 개최된 공청회에서 ‘신울진[현 신한울]원전1·2호기 건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보완요구서’를 제시하여 사실상 공청회를 무산시켰다.

이어 정부(당시 지식경제부)는 울진군과 범대위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8개대안사업 수용’을 담은 공문을 2008년 7월 9일 울진군에 통보하였다.

당시 지경부의 공문은 “사업시행자인 한수원이 울진군(민)과 적극 협의하여 8개대안사업을 추진할 것”을 담았다.¹⁰²

이어 울진군은 범대위를 해체하고 ‘8개대안사업’의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을 위한 ‘8개대

99. 2002년 5월 13일

100. 2007년 울진군의회 정기회 회의록

101. 당시 범대위는 ‘8개 대안’ 수립을 위해 울진군과 연계하여 10개 읍면과 지역사회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접수하여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정리하였다.

102. 울진군, 「원전관련 업무일지」

안사업협의체[협의체]’를 구성하였다. 당시 협의체는 울진군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범대위위원장, 울진군의회 원전특위 위원, 북면·죽변면 지역 군의원, 담당 공무원, 지역사회 단체 대표, 한울원자력본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어 2009년 4월 3일 지경부는 신울진원전1·2호기 건설[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협의체는 2014년 11월까지 수 차례의 회의를 진행하며 ‘8개대안’ 이행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이 결과 2014년 11월 21일 마침내 정부, 한수원과 울진군은 ‘8개대안사업’의 사업계획과 2,800억원의 사업비 규모 등을 담은 합의서를 체결하였다.¹⁰³

당시 체결한 합의서의 8개대안 사업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19> 8개 대안 사업 추진 합의서 내용

분야	사업명	사업 기간	총사업비(억 원)					비고
			합계	국·도비	지원금			
					소계	2015	2016	
총계			2,800		2,800	1,801	999	
문화관광 [3개 사업]	소계		1,450		1,450	715	735	
	북면장기개발계획	’15-’16	460		460	270	190	
	울진종합체육관건립	’15-’15	500		500	200	300	
	왕피천대교 건설	’15-’16	490		490	245	245	
환경	소계		510		510	450	60	
	울진지방상수도	’15-’16	510		510	450	60	
교육 [2개 사업]	소계		330		330	330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 교직원사택 확보	’15	30		30	30		
	울진군장학재단기금조성	’15	300		300	300		
의료	소계		510		510	306	204	
	울진군의료원 확장 및 장비현대화	’15-’16	510		510	306	204	
경제	한수원 휴양소 및 연수원 건립				사택부지내 직원휴양소 건립, 은퇴자마을 조성[한수원 시행]			
	신한울원전 건설 및 운영 지역 고용 창출				용접공 양성 및 고용창출 방안 협의 [한수원 시행]			

103. 울진군, 「원전관련 업무일지」